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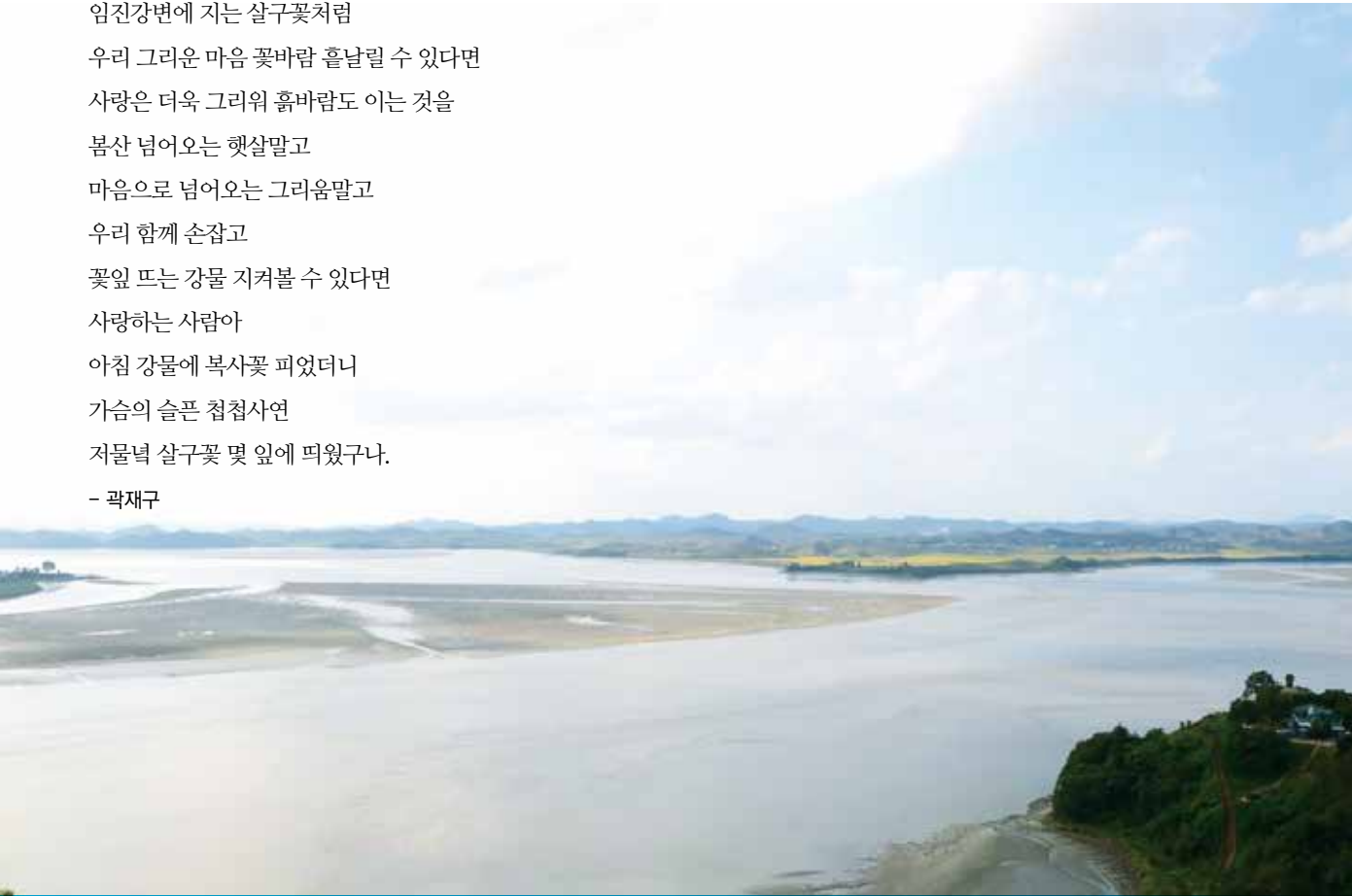


민화협 홈페이지

렌즈로 본 한반도

임진강 살구꽃

섬진강물에 피는 복사꽃처럼
 임진강변에 지는 살구꽃처럼
 우리 그리운 마음 꽃바람 흩날릴 수 있다면
 사랑은 더욱 그리워 흠바람도 이는 것을
 봄산 넘어오는 햇살말고
 마음으로 넘어오는 그리움말고
 우리 함께 손잡고
 꽃잎 뜨는 강물 지켜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아
 아침 강물에 복사꽃 피었더니
 가슴의 슬픈 침침사연
 저물녘 살구꽃 몇 잎에 띄웠구나.
 - 광재구



민족화해

07 2016
 July/August
 08 Vol.81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특집
 미국 대선과 한반도



Contents

2016 July / August_Vol.81



02 포토 에세이

실향민들의 마음 속 '그리운 내 고향'

04 특집_ 미국 대선과 한반도

- 미국의 권력교체기 대비해 포괄적 북핵·외교정책 수립해야 | 정구연
- 합리적 논의와 초당적 협력, 다자외교 통해 세계질서 불확실성 극복해야 | 정성철
- 미국을 뒤흔든 트럼프, 샌더스 신드롬 같은 불안 다른 접근법 | 김진하

16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_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공감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 통일의 마음 씨앗을 심겠습니다

22 시선 대 시선_ 김보근 vs 이영종

국제제재 공조, 북한 변화 주목하며 새로운 남북관계 틀 준비해야

28 기획연재_ 통일로 가는 길 ⑨

- 소통과 공감이 확대되는 통일논의 시작하자 | 이종석
- 통합 없이 통일준비는 없다 | 류길재

32 현장_ 통일공감포럼 발족식 및 통일공감대화

통일에 대한 합리적 공론 만드는 소통의 장 | 편집부

36 만나고 싶었습니다_ 테레사 현 캐나다 요크대 교수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랑으로, 결국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40 특별기고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한반도 평화 | 이장희



민족화해 2016년 7 + 8월호(격월간, 통권 81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발행인 홍사덕

편집인 공용철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김성경, 박인휘, 성기영, 이상준, 전영선

편집장 박지웅

편집부 이현희, 염규현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COVER STORY

올해로 2회 째를 맞이한 통일박람회.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통일박람회 민화협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저마다 통일의 희망을 담은 풍선을 손에 쥐고, 푸른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포즈를 취했다.

44 이슈 & 포커스

- 북중관계 정상화 가능성 ... 대북제재 위한 한중 소통 긴밀히 유지해야 | 이상숙
- 북한을 둘러싼 러·중의 미묘한 신경전, 한·중·러 공조체제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 신병식

52 진단_ 남북민간교류 진단과 과제

남북한 대외환경 변화,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로드맵 제시하자 | 이우영

56 통일공간·통일공감_ 판문점 통일기행

분단 현장에서 찾은 '평화의 시그널' |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60 문화모니터_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⑤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 | 이상현

62 민족화해 네트워크

64 현장_ 제3회 청소년통일공감대토론회

통일을 향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목소리
"통일의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68 현장_ 2016 통일박람회

통일 염원 함께 나눈 '2016 통일박람회'
민화협, 평화와 통일염원 트리아트로 많은 호응 얻어 |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70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2 독자 의견



실향민들의 마음 속 '그리운 내 고향'



어릴 적 뛰놀던 고향집을 기억하시나요.
 실향민 1세대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고향은 여전히 푸르고 정겹습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어도, 철없는 코흘리개가
 하얀 머리 노인이 되었어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리운 내고향집으로, 꿈에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앞 밤나무를 쓰다듬고 반갑게 울고 싶습니다.
 '나 대신 우리 집을 네가 지켰구나.'

“ 보고 싶은 부모 형제 만나고 싶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던 집도 그리고 함께 놀던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꿈에서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 장숙자(1944년생/평안북도)

* 통일교육원이 진행하는 '그리운 내고향' 사업에 출품된 그림과 글.

특집_ 미국 대선과 한반도 ①

미국의 권력교체기 대비해 포괄적 북핵·외교정책 수립해야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6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6차 북핵 세미나인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세계 비핵화 등을 요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로 인해 북핵문제는 미중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



미 대선과 한반도 상황 북한의 핵 고도화 가능성 높아져

미국 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점철되어있다. 지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은 미 행정명령 및 의회의 대북제재법,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다. 물론 제재 국면에서 동북아시아 역내에는 단합된 대북 강압연합이 형성되지 못하고 한·미·일, 중·러 그리고 북한의 삼각 구도가 형성되며 북한은 기회이자 위기라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삼각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록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구체적인 북핵 문제 출구전략과 여타 한반도 관련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였으며 동시에 경제·핵병진노선의 지속과 핵능력 고도화를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북경에서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및 세계 비핵화 등을 요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로 인해 북핵문제는 미중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게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강온양면책의 일환으로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환기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수사라고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어 미국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론 이제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북

미국은 현재 제45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으며, 7월 25일 필라델피아와 7월 18일 클리블랜드에서 각각 시작될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공식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로 이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승리하여 두 후보 간 본선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의 경선과정은 미국 국내정치지형의 변화가 거론될 정도로 아웃사이드 후보의 선전이 현저하게 관찰되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 2015년까지 무소속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다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였고,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의회 재직 경험이 전무한 사업가로서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전통적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원인은 기존의 정치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못했다는 불만이 존재했고, 이러한 불만을 비전통적 후보들이 대중영합적 선거 레토릭에 담아냄으로써 이들의 선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유권자 및 정당 내부의 이념적 분극화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유권자 증가 등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혹자는 미국 유권자들 사이의 이념적, 인구학적,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투표연합 재편을 지적하고, 올해 대선에서 목격되는 정책적 재편이 장기적으로 각 당의 정강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한다. 즉 새로운 민주·공화당 연합의 재조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당지지기반 재편이 이뤄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미국의 대외정책차원에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이상 변화에 따라 전략적 목표와 수단 역시 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전략 변화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해온 것은 아니다. 세간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 아래 미국이 북한 문제를 방기해왔다고 비난하지만, 미국은 여러 차례의 탐색적 대화를 비롯, 이란·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쏟은 노력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동안 획기적인 북핵 접근법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 중국 정책과 연동되어있어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접근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으나, 대화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미국은 대선 국면에 있기에 향후 최소 1년간 북핵문제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자리 잡기 전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이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 및 투발수단 완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선제 강압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자 역내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두 후보의 상이한 한반도 정책 공약, 상황에 따른 대비 절실해

향후 어떤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후보 간 북핵문제 해결에 대

한 입장은 매우 상이하며, 대전략의 이념틀 역시 대조적이다.

우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외정책은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해보았을 때 공히 자유국제주의의 큰 틀에 범주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탈 패권 자유국제주의(post-hegemonic liberal internationalism)에 기반 한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 패권국으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다자적 차원에서 분담하고 문제해결방식으로서의 무력 사용 자제(restraint)를 선호, 소위 축소(retrenchment)적 정책을 수행했다.

어떠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정책과 북한 비핵화전략의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대외정책 지평 역시 변화할 수 있는 바, 주요 후보들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배경에는 미국 경기하락과 오바마 대통령 집권당시의 전략적 환경, 즉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자유국제주의의 범주에서 대외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것이나, 서구 자유질서의

관리자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회복하고자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의 시리아, 우크라이나 접근방식을 수세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당선되었을 시 신행정부의 진용과 미국이 처할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정책은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재임했던 시절 제시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제재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고 특히 이란 핵협상의 선례를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클린턴 후보는 협상과 제재를 통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클린턴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고 있으며, 당선 후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경선 기간 공개된 그의 외교안보정책 공약이 미국대외정책 이념 틀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혹자는 미국국가주의자로, 혹은 잭소니언 대중영합주의자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경선과정 속에서 일관성이 없이 공약이 언급되곤 하여 그의 대외정책을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다만 여러 공약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그의 외교안보정책이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 현실주의와 고립주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후보의 아시아 정책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미국에게 지불해야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허용해야한다고 언급했으며, 혹은 역내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의 대 중국정책은 경제적 차원에 경도되어있어, 미중 대외무역관계의 재조정과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북핵문제는 중국이 풀어야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 중국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의 대북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2000년에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고, 올해 경선과정에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반면 최근에는 '김정은과 마주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트럼프 선거캠프에는 아시아정책자문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기도 한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 대비한 포괄적 접근법 필요하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할 두 후보가 제시한 대외정책공약은 향후 사뭇 상이한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의 제재국면 모멘텀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지금의 동북아 전략 환경 구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대북 제재의 모멘텀도 유지할 공산이 크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구체적 전략과 비핵화 로드맵이 좀 더 공세적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 지금의 재균형 전략 약화 및 동맹체제 이완으로 인해 동북아 전략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한미동맹의 위상 역시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고, 대북 접근법은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정책과 북한 비핵화전략의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대외정책 지평 역시 변화할 수 있는 바, 주요 후보들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지금의 선거 국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회나 기타 정책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⑤

정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이후 국립외교원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특집_ 미국 대선과 한반도 ②

합리적 논의와 초당적 협력, 다자외교 통해 세계질서 불확실성 극복해야

정성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바마 미국 대통령(앞줄 왼쪽 두번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맨 오른쪽)이 4월 1일 오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각국 정상 등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미국이 요란하다. 다양한 이변과 뜨거운 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결정되었다. 남성과 여성, 사업가와 정치가, 비주류와 주류로 구분되는 두 대선 후보는 낙태와 총기규제 같은 국내 이슈 뿐 아니라 동맹과 브렉시트 등 국제 문제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개진한다. 따라서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가운데 국제정치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예상하는 중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의 동맹과 핵무장 발언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있다. 과연 2017년 미국의 아시아 외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무엇일까?

트럼프와 클린턴의 상이한 외교정책

올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은 증가한다. 트럼프는 이른바 워싱턴 정치를 비판하며 대중의 불만을 대변하며 인기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미중 무역관계 재조정, 무슬림 입국 금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등 헤드라인 발언을 쏟아냈다. 과연 트럼프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분명 트럼프는 임기 초반 개인적 학습(learning)을 겪고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정확히 40년 전 워터게이트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워싱턴 정치의 문외한 지미 카터는 인권외교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임기 말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 트럼프가 선거공약에서 자유롭고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수록 불확실성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과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의 리더십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와 불투명한 정책결정으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반면 클린턴의 대선 승리는 미국 중심 동맹네트워크의 강화를 의미한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미국 탈냉전 세계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와 경제 그물망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단극 체제를 견고히 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이러한 대외전략을 클린턴은 과거에 국무장관으로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클린턴의 대외전략 관련 발언은 그다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국무장관으로 일한 현 행정부의 정책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바마와 비교하여 클린턴은 보다 강경한 입장과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높다. 탈냉전기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무력사용을 고민하는 햄릿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클린턴의 스마트파워는 외교와 무력 사이에서 다소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관계, 경쟁 속 동거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와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임기 초 상이한 모습을 띠 수밖에 없다. 특히 대 중국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면, 클린턴은 영토분쟁과 인권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할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일각에서 ‘고립주의’ 회귀로 표현하지만, 포퓰리즘 외교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이 무역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고 동맹을 대신해 과도한 짐을 지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따질 것은 따지고 버릴 것은 버리겠다

는 그의 주장에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이 물건을 팔 때, 미국은 투자를 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구입할 때,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받는다. 트럼프 역시 미중 상호의존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옵션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며, 어떻게 동거하느냐가 남은 문제이다.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안보와 인권에서 중국과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동맹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클린턴에게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용납하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 호주와 필리핀 등 주요 우방과 더불어 클린턴은 미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힘의 우위를 굳건히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유와 인권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클린턴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배격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대선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운 글로벌 세계질서에 중국이 순응하면서 역내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비록 2008년 금융위기로 휘청거렸지만 사실상 회복한 지금 클린턴이 아시아 주도국의 지위를 중국에 넘겨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중 관계와 한국의 외교, 국내통합과 다자외교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외교환경은 어떠한 것인가?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 남사군도 분쟁,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입장과 요구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두 강대국을 모두 만족

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이 힘들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지 차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볼 때 미중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의 곤란함은 빈번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이 한국을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라고 표현하거나 미중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과 딜레마를 확인하고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통일과 안정을 달성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과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청일전쟁에서 강대국 세력전이의 피해자였지만 21세기 강대국 세력전이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대외정책을 둘러싼 합리적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 표명과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와 별개로 국내 논의는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어 갔다.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친미와 반미,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에 갇힌 논쟁 속에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외교의 강점은 단순히 다양한 의견의 공존이 아니라 합리적 논의를 통한 굳건한 합의에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민의 입장일 경우 설사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 변화를 손쉽게 요구하거나 낙관적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반대로 우리 사회가 특정 외교 이슈에 대해 분열되었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압박과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반도의 통일과 안정이라는 대의 앞에 이념과 정당, 지역과 계층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자외교를 통한 미중 세력전이 극복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로 하여금 비슷한 고민을 안겨다주었다. 안미경중



지난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면 한국의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군사상 분명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한 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 4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申谷元)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은 모습. ©연합

(安美經中)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지만 미국을 통해 중국 위협을 막으려는 유사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다자외교를 제도화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도출하고 함께 행동하는 비강대국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다자외교는 강대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들어 비강대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는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소규모 다자협력

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을 창출하고 있다. 향후 미중 세력전이를 고민하는 비강대국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또 다른 한국외교의 주춧돌은 마련될 것이다.

정성철은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집_ 미국 대선과 한반도 ③

미국을 뒤흔든 트럼프, 샌더스 신드롬 같은 불만 다른 접근법

김진하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016년 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왼쪽)와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



2016년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후보는 민주·공화 양당의 주류 정치세력에 경종을 울린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였다.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서 초기 예상과는 달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팽팽히 맞서며 돌풍을 일으켰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유력한 후보들을 초반부터 패퇴시키고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선을 치루면서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받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비주류 정치인들이 양당 경선과정에서 동시에 각광을 받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일까?

신드롬의 근원, 경제 불평등

결론부터 말하면, 선진국 공통의 저성장 경제와 정치, 사회적 불안정을 워싱턴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주·공화 양당이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2015년 《포춘》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개인 소득의 41.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다. 반면,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분야에서 세계 제1위(Allianz 보고서)이며,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을 보여주는 지니계수(Gini Index)는 세계 제4위(OECD 보고서)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부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불평등 문제가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이고 부의 집중 문제인데 월스트리트와 거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샌더스의 지적에 동감하는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한 것이다. 또 미국의 일자리 부족은 이민과 자유무역 때문이고, 테러 등 사회불안은 미국 외교와 이민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우리 언론이 한국의 현 젊은 세대를 부모보다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미국은 이미 부모보다 못하는 세대가 시작되었다. 제조업의 아웃소싱과 경쟁력 약화로 부모가 다니던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숙련노동 시장이나 준 숙련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비숙련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주소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제조업의 증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호소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고용축진을 몇 차례 애플에 호소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고, 애플의 부는 계속 축적되지만,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아이폰의 구매자일 뿐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민주당의 고민, '집토끼' 노동자의 이탈

미국 고용지수를 보면 2010년 약 10%의 실업률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4월 현재 4.7%까지 떨어졌다. 고용증진으로 소비자 소비심리가 회복되었고, 이는 2016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예측보다 상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2016년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다. 미국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재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포춘》지 보도에 따르면,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던 게 미국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은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기존 민주당 정책라인을 불신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 경제개혁 드라이브

를 걸어야 한다고 믿는 노동자와 진보적 지식인층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전국 노조가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스무 개 이상 지역의 노조들이 샌더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샌더스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며칠 전 미국 최대 노조연합인 AFL-CIO가 공식적으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그 이면에는 지역의 소상공장 노조원들이 샌더스 후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등 노동계의 분열이 계속되고, 더 심각하게는 블루칼라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그 배경에 있다.

미국 백인, 보수주의의 회귀

왜 블루칼라 백인 노동자들이 부자와 중산층을 대표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이민자의 유입으로 위협받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는 극단의 민족주의적 보수화 운동이 여러 번 있어왔다. 1854년, 56년 선거 당시 미국 동북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무지당(Know-Nothing Party)은 반 아이리시, 반 천주교 정서를 가진 개신교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1840년대와 1850년대 걸친 대기근으로 궁핍해진 아이리시들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 시간당 임금의 하락과 구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들이 미국의 공화주의 정신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반 이민, 반 천주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세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고, 1968년 대선에서 미국독립당(American Independent Party)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인종 분리주의자인 조지 월러스(George Wallace)는 1968년 미국 대선에서 남부 5개주에서 승리했고, 4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월러스 이후 그 어떤 3당의 후보도 단 한

명의 선거인단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월러스의 1968년 선거는 역사성이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출신의 월러스가 민주당이 소외시켰던 블루칼라 백인들을 공화당이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 공화당에 전략적 교훈을 주었다는 점이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진영은 블루칼라 백인 노조원들의 표가 분열되어 험프리 부통령이 선거에서 질 것을 두려워했고, 공화당은 보수표가 분열되어 민주당에게 승리를 내어줄 것을 두려워했다. 월러스는 인종문제, 사회문제를 정치의 주요쟁점으로 만들어, 블루칼라 백인들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시켰고, 그 후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남부의 백인을 뉴딜연합으로부터 떼어내는 선거 전략으로 미국 선거판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 트럼프에게서는 월러스와 무지당의 향취를 느낀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은 개신교도, 백인남성 블루칼라 노동자, 지역적으로는 남부 등이다. 개신교도들에게는 1850년대 그들이 천주교에 느꼈던 공포와 불쾌감의 대상이 2016년 무슬림으로 바뀐 것이고, 백인남성 블루칼라 노동자에게는 문제의 대상이 1960년대 흑인에서 2016년 라틴계 이민자로 바뀌었을 뿐 기본적 프레임은 같다. 뿌리 깊은 인종 분리 사상은 오늘날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하고, 종교적 순혈주의는 무슬림의 추방을 공언하는 트럼프에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뿌리 깊은 균열이 가져온 선거연합의 붕괴

샌더스, 트럼프 신드롬의 원인은 자명해 보인다.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이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로 신음하는 소외 받는 계층을 민주·공화당의 주류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해 샌더스는 사회민주주의로, 트럼프는 극우적 보수주의로 접근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

턴 후보는 트럼프의 극우적 보수주의를 두려워하는 초대형 기업의 전현직 CEO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는 정작 집토끼인 노동자들과 자유주의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정책이 아니라, 노동, 경제개혁 정책인데, 이를 외면하면 노동자의 이탈로 뉴딜연합의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다. 경제적 이슈가 인종, 종교의 사회이슈에 지배되면서 뉴딜연합은 외항만 남고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이탈로 이미 깨졌다고 볼 수도 있다. 샌더스는 민주당의 경강정책 초안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68년 선거전에서 월러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자신만이 인종분리를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러스의 주장은 인종정책에 관한 것이었지만, 경제정책상 민주당이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는 백인 남성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고, 자유주의자들과 일반 노동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샌더스, 트럼프 신드롬은 미국정치의 뿌리 깊은 균열구조의 연장선상에 있고,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 불평등과 사회문제에 기인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해답을 샌더스와 트럼프가 내어놓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현 미국 정당의 정체성의 위기도 관련되어 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려다가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미국의 선거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 미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클린턴 후보가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제45대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가 확실시 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하지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의 확실한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외교정책에 있어 오바마 정부와의 차별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정책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월러스가 1968년 선거에서 주장한 것처럼, 더 많은 분담금을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에게 요구할 것이고, 군사적으로 한국과 우방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사안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고, 월러스가 앨라배마 주지사 시절 파격적 조건으로 북부의 기업을 유치했듯이, 트럼프가 자국의 기업이나 공장시설에 특혜를 주거나 적극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을 기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트럼프가 구체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앞날을 예측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④

김진하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Rochester 대학에서 석사, Northwester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Northwestern 대학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연구원을 역임했다.

공감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 통일의 마음 씨앗을 심겠습니다

통일교육원장 **이금순**



이금순 원장은 여성학과 국제정치를 연구해 온 학자로 통일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북한, 통일 관련 연구를 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통일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며 함께 만드는 통일교육, 소통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통일교육을 강조한다. 마음의 소통을 통해 목표 지향이 아닌 공감 지향의 통일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일, 바로 이 원장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통일준비의 길이다.

대담 **박현선**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
정리 **이현희** 민화협 정책홍보팀장 | 사진 **백운종** 객원작가

Q 지난 2015년 6월 통일교육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는데,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오랫동안 통일, 북한 관련 연구자로 활동했기에 그동안 연구의 경험이 통일교육에 잘 녹아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의 통일교육 사업은 현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연구의 차원을 넘어 현장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1년이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 역량을 기르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Q 원장님은 연구자로 활동하시고 이제는 실천을 겸하는 자리에 있어 통일에 대한 연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활동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A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인데, 그 핵심이 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이는 교육원 업무와도 바로 연계됩니다. 특히 교육원에서는 통일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하도록 힘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통일교육 주간입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적어도 이 기간에는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취업 등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만, 교양과목을 통해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진로와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정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는 등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A 젊은 세대의 최우선 관심사가 취업과 진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전공 영역과 관계없이 통일을 자신들의 분야와 연계시켜 생각하도록 하고, 그들의 다양한 관심과 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통일교육 선도대학이나 지역의 통일교육센터도 공모대회, 토론대회 등 참여하는 방식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학생들이 한 번쯤은 전공에 관계없이 통일, 북한 관련 과목을 듣고 졸업했으면 합니다. 분단국가의 대학생으로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은 제대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일, 북한관련 과목을 교양 필수로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핵심 교양과목으로 시작해서 교양필수로 가도록 하려 합니다.

Q 공감하는 통일교육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A 사업을 추진 할 때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공감하는 통일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통일 관련 영상을 만들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인지를 다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개발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교육원 내에서도 협업을 강화하고, 외부단체 및 기관과도 협업을 강화하면서 해 나가려 합니다.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서로 어우러지는 통일교육이 필요합니다”

Q 원장님은 북한 인권, 탈북자 보호와 정착지원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A 북한이탈주민들이 별도 대상으로 우리와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교육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통일과 통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을 미리 챙겨보고 행복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일준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이지 별도로 대상화하는 통일교육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Q 원장님이 연구자로, 또 여성으로 중책을 맡고 계신 것이 여성 연구자와 여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준비에 있어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흔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성자원이 통일준비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1일 민화협이 부산에서 개최한 ‘여성평화통일부산포럼’에 참여했는데, 전쟁 중 피난지였던 곳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여성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성이 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만

드는 자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여성들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여성학과 국제관계를 전공한 여성학자로, 통일연구원에서 처음 시작한 연구가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였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대북지원 연구를 하면서도 여성의 시각에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일준비 과정에서 이렇듯 여성의 시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성 스스로가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향민이 그린 고향 그림은 영혼이 담긴 현대사의 기록입니다”

Q 최근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실향민의 고향에 대한 그림을 모으는 ‘그리운 내 고향’사업은 그동안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로 보입니까.

A 교육원도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하지만, 단순히 목표한 규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분들이 통일이 꼭 필요하고 나도 무언가 역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통일교육, 공감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한데, 강의 등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통하게 하고 본인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참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새롭게 꾸미는 과정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는 ‘그리운 내 고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미술을 하는 강익중 작가가 처음 제안했는데, 실향민 1세대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세대와 정치적 논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통일 이야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데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실향민 1세대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또 고향에 대한 기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 오히려 80~9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더 고향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고, 그리움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민화협이 개최한 부산포럼에 참여하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는 실향민 1세대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받았습시다. 그림을 요청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이 처음에는 못 그리겠다고 주저하시지만, 옆에서 같이 기억을 되살려보자고 하면 그림이나 글을 적어주십니다. 한분 한분의 그림과 글이 화가나 시인의 작품 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는 그림보다 영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이고, 상세한 현대사의 기록입니다.

Q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겪은 많은 과오가 있는데,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는 역사기록을 모으는 일이고, 또 통일논의에서 소외되어 온 실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A 피난 때 가져온 자료나 사진,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유품, 스케치북 등도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전시하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 작품을 설치할 때 북한

지역 시군별로 같이 모아 전시를 하려 합니다. 그림 안에서 친구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기록을 모아야 하는 작업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Q 우리 사회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진영논리가 통일교육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자로 느낀 소감은 많은 사람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각자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이 오히려 아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더 열린 자세로 통일과 남북문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교육할 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지 않고,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이야기하지만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화협을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 및 기관,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교육 연구학교 등과 협력하면서 함께 만드는 통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에 대한 긍정의 힘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① 민화협도 성향이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통일교육네트워드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로 북한관은 다르지만 통일교육의 방법과 콘텐츠 부분에는 공감하며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통일교육에서 민관협력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② 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통일교육단체 등 대상에 따른 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대를 아우르고 계층과 대상을 아우르는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관협력이 중요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때도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의 통일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려합니다. 최근 교육원은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유적과 분단현장을 발굴하여,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기관, 지역사회와 협력하면 훨씬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③ 원장님은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④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천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많은 분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천운동을 통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로 결집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통일이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심하다

고 우려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기에 생각을 조금 돌리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새롭게 만든 통일부의 통합 슬로건이 ‘그래서 통일입니다’인데,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하지만, 답은 통일이라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키워 나가면,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 새로운 힘을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긍정의 힘을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⑤ 앞으로 원장으로 향후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⑥ 연구자로서 여성으로서 제가 경험한 장점을 잘 살려 통일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싶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들이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실현되는 환경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른들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약력

-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회장
- 통일교육원 원장 (현)

그리운 내 고향, 기억하시나요?

작가 강익종과 통일교육원이 함께하는 작품 <그리운 내 고향>은 북한이 고향인 어르신들의 그림, 약도, 글 등을 모아 만드는 벽화 작품입니다.

<그리운 내 고향>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2층 전시실에 영구 작품으로 설치됩니다. 올해 8월 15일을 시작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오두산 전망대를 찾으면 언제든지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년 뒤 손주들이 오두산 전망대를 찾아와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림 또는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내 고향”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고향 동네 길, 내 고향 풍경, 내 집 모습, 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얼굴 등 고향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작은 네모 속에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문의 :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02-901-705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우) 101018 / 홈페이지 안내 : www.uniedu.go.kr
접수처 :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요 후원: 중앙일보
주관: KEB하나은행

국제제재 공조, 북한 변화 주목하며 새로운 남북관계 틀 준비해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을 이끌어내며, 북핵 문제의 악순환을 이번만은 반드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선 대 시선'에서는 오랫동안 남북문제를 다뤄온 두 언론인을 초대하여 2016년 상반기 남북관계를 평가, 전망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언론과 민간의 역할도 모색해 보았다.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장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대담 이영중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사회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대담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사회자(박인휘)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는 별 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경색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남북관계를 평가해 달라.

이영중 집권 5년차의 김정은 체제가 모험주의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핵, 미사일 등 도발 뒤 다시 당 대회를 통해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하며 유화국면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동시에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반발이 북한의 예상보다 컸던 것 같다. 북한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남전술 부분도 도발에서 유화정책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스스로 다소 과대평가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당장 남북관계의 어떤 실마리가 풀리긴 힘든 상황이다. 가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 대북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서 있는 상황이다.

김보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느낀 당혹감에는 정보력의 부재 탓도 컸다. 모르고 있다가 당한 꼴이니 정부가 예전과는 다르게 더 강하게 대응한 것 같다. 하지만 북은 항상 모험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핵 문제는 무기화 될 때까지 계속 실험할 것이라 예상되던 부분이었다. 때문에 제재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제재하더라도 남북관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어디로 갈 것인지 준비하며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보다 더 강하게 나가다보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회복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까지 했다. 때문에 이 상황이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자 올 상반기 남북관계, 북한 정세의 사건 중 하

나는 북한의 7차 당 대회였다. 김정은 체제의 공교화, 핵·경제 병진 노선의 재확인 등을 주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영중 당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 대회가 가지는 무게에 비해, 김정은 체제의 향후 비전을 보여주는 콘텐츠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 예를 들어 6차 당 대회 때 김일성 주석은 향후 10년의 과제를 구체적 과업을 통해 제시했다. 이번엔 그런 부분이 없었다. 또 핵 문제 등 기존 노선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선 비전, 국가전략을 보여 주지 못했다. 남북관계도 만약 유화국면으로 돌아설 생각이었다면 조금은 더 획기적 제안도 가능했다고 본다. 추후 윤곽이 더 드러날 수 있겠지만 당 대회 자체의 모습으로서는 북한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했다고 본다.

김보근 과거 김정일 체제를 상징했던 선군정치를 탈피해 가는 과정,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렸다는 자체가 군에 의한 통치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물질적 조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진용 갖추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경제 부분에 역량을 쏟겠다는 의도는 보인다. 그리고 이미 2012년 6·28방침, 2013년 경제·핵 병진정책, 2014년 5·30조치 등을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었다. 새로운 경제 전략을 추진해보겠다는 출발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변화에는 북한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중산층의 요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미래상 보여주지 못한 당 대회
VS
새로운 경제 전략 위한 출발점의 의미

사회자 우리가 이해하는 중산층은 정부로부터 권리, 권력을 더 많이 요구하고 많은 정보를 원한다.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향후 북한의 경제건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진다면 북한 중산층에서 비롯된 사회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영종 시장세력, 이른 바 돈주나 북한 권력에 새로 진출한 파워엘리트 그룹들이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북한 체제 내 시민사회의 형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동유럽 사례처럼 정당 지도자, 지역 세력 등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김정은이 용인할 수 있을까. 다소 비관적이다. 그들이 경제적 면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사회 변혁을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다.

김보근 대집단체조 아리랑 사례를 들고 싶다. 아리랑은 능라도 5·1경기장 외에선 할 수 없다. 카드섹션에만 7만 명이 동원된다. 5·1경기장이 15만 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7만 명이 카드섹션을 하고 7만 명이 계속 바뀌면서 공연하는 아리랑은 이곳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곳을 국제축구경기

장으로 바꿔버렸다. 저는 이것을 인민들의 변화 욕구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다. 실재 김정은 시대에 아리랑 공연은 열린 적이 없다. 이것이 중산층 형성으로 나타난 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중 경협을 위해 김정은 시대 들어 투자 조건 등 기업 자율권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한다. 자율권이 주어지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자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이 모호하다. 평화공세로 보이다가도 도발을 이어간다. 앞으로의 제재 국면 속에서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영종 김정은 시대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의 대남정책을 보면 좌충우돌이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다. 과거 북한의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척 정교한 측면이 있었다. 베테랑도 많았다. 지금은 그런 정교함이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이는 남쪽도 어느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남북 모두 대북, 대남 분야의 전략가들이 부족한 것이 남북관계를 꼬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인 것 같다. 북



한 당국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역시 핵 문제 등에서 유연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입장이다. 남북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보근 기본적으로 남쪽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부분적 대화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안보, 경제, 사회통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북 지도부도 그것을 고민할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에서는 남북이 안보, 경제, 사회통합 등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남북 모두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중산층의 대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체제의 이완세력이 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쪽을 긴장감 조성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다. 경제는 과거 남쪽과의 부분을 중국이 대체해 가고 있고, 안보는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다.

**북핵 더이상 안된다는 국제적 공감대 있어
Vs
대북제재 이후 장기적 플랜 필요**

사회자 두 분 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다뤄온 언론인이다. 북한 문제, 남북관계가 의도치 않게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거기에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정보 접근의 제한성 등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김보근 우리 언론인들의 기본적 능력과 자질을 믿는다. 하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북한 문제는 조금 더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의 소스가 국정

원이나 통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일 때가 많다. 그런데 그들이 언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타 분야에 비해 북한이란 영역은 정보의 제한성이 높다. 항상 긴장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오보임이 밝혀진 리영길 총참모장 숙청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자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기보다는 정부 당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영종 북한 분야 취재 현장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 기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해 보도하려는 모습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리영길 사례 같은 것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이 없다. 정보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 저는 북한 뉴스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주의나 주장보다는 팩트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매체의 성향이나 자신의 주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감상적이고 주의주장 위주의 기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언론사 자체도 통일문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만큼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자 대북제재를 포함해 남북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행보, 미국의 역할과 향후 대북정책 전망 등을 평가해 달라.

김보근 미국은 '북한이 죽지 않을 만큼'이라는 정책 기조, 중국은 '동북3성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도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필요하고,

특히 ‘말쟁쟁이’ 북한의 존재가 미국에게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북한의 생존은 필요하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국은 북한이 없다고 했을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미군과 대치해야 하는, 중국의 국가적 안보전략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동북3성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소득순위 1~3위를 차지했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장, 위구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북의 자원이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의 리더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 동북3성 지역은 북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미중의 전략을 보면 북한은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구도다.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영중 미중이 한반도를 놓고 패권 경쟁을 심화할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국제사회 의무준수 등을 통해 자신이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속 준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이 자신이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시점에 김정은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을 정도 우리 정부가 말하듯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 중국이 진심으로 제재를 계속 하다가 북한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김정은도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대선 결과에 대해 북한도 축구를 곤두세우고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북한에게 결코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사회자 **현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 포기 쉽게 연결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제공조의 동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떤 목표설정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김보근 우리 외교의 목표는 국가의 발전이 되어야지 북핵에 맞춰지면 안 된다. 중국의 경제 공세나 미중 간 알력 속에서 우리 활로는 무엇인지, 역할은 어떤 것인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북핵 제재만 성공하면 된다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 또한 제재국면은 결국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재 이후의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이영중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이 국내에서 일견 저평가되어있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상당히 구체적 액션을 동반하고 있고 전례 없이 디테일하게 짜여있다. 쉽게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북핵에 대해 이전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빠지거나, 또 이쯤 했으니까 됐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국면이다. 물론 차기 한국 정부가 2018년 들어서면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정부가 쉽게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낙인 효과라는 게 있다.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노동당 자금으로 흘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 때문에 다음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 해도 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전략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고려할 수 있어
VS
인도적 지원에는 전략적 판단 개입되면 안돼

사회자 우리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라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영중 인도적 지원 문제는 고통 받는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활동가적 시각과 중요한 정책 부분에서는,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줘야 할 때 주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그런 경우인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국민 상당수 여론이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쪽인 것 같다.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제재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적정한 시점에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방법 등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보근 인도적 지원은 원칙상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 원칙은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대북 접촉조차 막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인도적 지원은 어떤 다른 전략이 개입치 않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면 그 원칙에 맞게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인도적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지원단체와 지원물품이 북한에 가는 것이, 남북관계가 이제는 풀린다는 하나의 신호로 작용했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제재국면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자 **현 정부는 그동안 통일의 중요성, 통일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통일준비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이기도 하기에 민화협은 최근 통일공감포럼을 발족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장을 준비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통일준비를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제언해 달라.**

김보근 지난 김정은 체제 5년, 현 정부 4년을 보면 통일문제가 과거에 비해 국내 정치화된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우리 정부의 통일대박,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등은 북한과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이 호응할 수 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내부에서만 논의되었다. 북한 역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대남관계를 긴장조성에 이용해왔다. 이제는 커다란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지난 20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실적인 정책 하에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각국이 너무 커져버렸기에 과정은 굉장히 더디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영중 북한 이슈는 우리사회 이념적 갈등의 바로미터로 작용해왔다. 그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일공감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덧붙여 민화협이 앞으로 통일준비, 남남갈등 해소 부분을 이끌어 나갈 때 보다 각론에 주력했으면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통일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70년 동안 통일준비는 지나치게 거대담론 위주로 이야기되었다. 이전 당장 내일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가야 한다. 🌐

소통과 공감의 확대되는 통일논의 시작하자*

이중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일은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고 다른 문화와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하나로 융합해내는 것이다. 여러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삶의 양식과 정신, 문명을 공유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일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남북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화해와 신뢰,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전환을 위해 우리는 남북의 소통과 공감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간 소통과 공감은커녕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 간 소통에도 심각한 부전(不全) 현상이 발생하여 남남갈등에 안녕할 날이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을 멀게 하고 국력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일이다. 이렇다보니 통일논의가 소통과 공감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자괴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상식과 합리성 회복이 필요

우리사회가 통일논의에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

통하고 공감의 장을 넓혀 나갈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통일논의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통일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공리(公理)를 환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다. 그리고 통일(대북)분야로 한정시키면 남북 간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공동 번영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강조점이나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대부분은 이러한 목표 규정에 동의할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통일 논의에서 목표가 아닌 방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동안 양 세력은 대부분 사안에서 마치 근본적인 목표부터 다른 양 사생결단식 대립을 해왔다. 사실 한반도 평화·안정·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한 그 방법론은 이념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상황과 우리 능력을 고려한 판단'에 불과한데도 우리사회는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 차이로 확대시키며 소모적 분열확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통일문제를 상식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상식

회복운동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누군가 통일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보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북한 편인지 아닌지'부터 가리려는 분위기가 퍼져왔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공통의 기준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설득력을 지녔는지 여부다. 실사구시보다는 편 가르기에 익숙한 사회분위기는 국민과 민족에 대한 진정성보다 정치적 야망이 앞선 '선동적인 정치인들'과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 발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통일문제에서 상식과 합리성의 회복은 이러한 위선적 정치인들과 위장 전문가들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함으로써, 통일논의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존의 문화가 통일의 시작이다

통일논의에서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제고한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 북한을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남남갈등의 상당 부분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 '사실'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한다. '북한경제'건 '김정은'이건 '실체'로서는 하나다.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 추구'이며, 여기에 진보와 보수의 '사실'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실은 하나다. 특히 정부 정책의 경우, 정책 담당자가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지 못하면, 그릇된 정보나 지식위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구나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북한'에 현실의 북한을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관련논의가 객관적 사실의 공유 위에서 해석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공감을 넓히는 소통이기도 하다.

한편 통일논의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통일은 상이한 제도와 사상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온 남북이라는 두 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나'와 '다름'이 공존하는 시대가 통일시대다. 즉, 자신과 다른 삶과 문화를 관용하고 수용해야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온 것은 공존보다는 배제의 문화였다는 점에서 '다름'에 대한 포용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이념적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정당 간 갈등 등이 그동안 상대를 생존공간에서 배제하는 제로섬 게임식으로 전개되어온 측면이 컸다. 사실 적대적 남남관계가 이 배제 문화의 정점에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남남공존'의 틀을 확립해 이 분야에서부터 배제와 제압의 논리를 혁파하고 공존의 논리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공존의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로 섬 게임의 투쟁이 아닌 부분승리를 취하는 협력적 경쟁문화의 창출이다. 경쟁을 더 이상 제로 섬 게임 방식으로 풀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이익을 취하는 부분승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양쪽이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적 승리가 완전한 승리보다 훨씬 개별 정치세력이나 국가를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여러 사회세력 간 공동승리의 문화가 형성되면 이것은 필경 남남관계에서도 대결보다는, 함께 살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존과 호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중석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제32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본 글은 지난 5월 24일 민화협이 개최한 '통일공감포럼' 발족식에서 발표된 모두연설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통합 없이 통일준비는 없다*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분단 71년을 맞이하면서도 이러한 성취가 ‘반쪽짜리’라는 점을, 군사력이 밀집된 DMZ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서만 벌어진 불완전한 것임을 통절한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성취는 어쩌면 분단 상황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적대적 대결과 체제 경쟁의 분단구조가 성취를 강박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불완전한 성취를 완전한 성취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부신 성취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게 하였다. 경제의 규모, 보편적 경제·정치체제, 활력 있는 사회와 문화 등 어느 면에서나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과신, 북한에 우리의 체제와 이념을 확산시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막연하고도 일방적인 기대, 은연중에 북한 정권의 붕괴에 이은 흡수통일의 가능성에 의존해 왔던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도 운이 좋다면 통일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운에만 의존하는 통일은

결코 바람직한 미래를 선사하지 않는다.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분단으로 저지당한 온전한 민족국가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하나가 되는 것, 즉,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되는 단일한 통일국가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통일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른 무엇인가 채워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통일은 형태가 아닌 과정이다

그것은 첫째,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물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와 사상, 외교와 안보 등 국가이익을 위한 차별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역사,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동질성 확보 노력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 스스로 몰역사적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바로 이 지점이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하는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다. 이를 망각하고 방기(放棄)한다면 더 이상 통일을 운위(云謂)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민족문제다. 우리 사회 일각에 북한을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다른 목적으로 호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법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족문제로서, 당사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전 한반도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 가치는 아마도 평화, 공존, 협력일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중과 함께 남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전쟁을 경험했기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규모의 파괴가 예상되므로 평화에 대한 강한 약속이 필요하다. 공존과 협력은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필요한 가치이다. 통일은 형태가 아닌 과정이다. 이런 가치를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 구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런 과정이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물리적 통일은 언젠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설령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만일 통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것이라면 그런 통일이 의미가 있을까.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지만, 남북의 문제들이 합쳐지는 통일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 건강한 경제, 활

력 있는 사회, 매력적인 문화로 구성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만 통일의 진정한 주도자가 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하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와 해법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 자칫 지난 60여 년의 성취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진대 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단지 대한민국에만 국한해 소극적으로 위기 탈출 수준에서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온전한 민족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로 대범하게 전환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통일이 따라 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선 아이들의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민족사적 과제를 주지시키기 위해서도, 장차 통일의 주체로 키우기 위해서도 통일 교육은 중요하다. 이것을 게을리한 기성세대는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끝으로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되어 많은 분란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갈등은 없다. 우리 내부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승능을 찾는 격이다. 통합 없이는 통일을 위한 준비도 없다. 

류길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장, 대통령실 외교안보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제37대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였다. 2005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본 글은 지난 5월 24일 민화협이 개최한 ‘통일공감포럼’ 발족식에서 발표된 모두연설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통일공감포럼 발족식 및 통일공감대화

통일에 대한 합리적 공론 만드는 소통의 장

편집부

민화협의 남남대화 전담기구인 '통일공감포럼'이 지난 5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했다. '통일공감포럼'은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을 높여 나가기 위해 출범했으며,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차경애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포럼은 분야의 전문가와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공론을 만들고 비전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 비전설계의 장으로 역할하고자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공감프로세스'로 운영된다.

상호 이해와 공감 넓히는 공감프로세스

발족식에서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분단 71년째에 접어든 지금 통일공감포럼 발족이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 기본부터 다질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모일 지혜와 다양

한 의견들이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민화협의 '국민적 합의도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민화협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공론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차경애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역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갈등으로는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공감 프로세스'로 운영하면서 “통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젊은 세대에는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는 “우리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크고 어려운 남북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통일공감포럼이 남남갈등을 완화하며 국민합의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이며,

이는 남북한이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합의한 기본정신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하며 분단국가로서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을 봐야 & 통일을 위해 인도주의, 사회문화, 경제적 차원의 소통 필요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통일공감대화'는 김진수 KBS 해설위원의 사회로, 참여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란히 자리했다. 두 전직 통일부 장관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 소

통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진단과 북핵문제, 대북정책, 통일준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통일논의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북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전 장관은 “정치와 사상, 외교와 안보 등과 같은 국가이익을 위한 차별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역사,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통일을 해야 하는 출발점이자 목표

©김성현





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는 그것이 무엇 이든 민족문제”로 “당사자인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는 두 장관의 의견이 같았다. 류길재 전 장관은 북한경제가 활력을 보이는 것은 국가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보다는 시장의 확산으로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당대회도 김정은 추대를 위한 이벤트성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 7차 당대회는 북한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을 이뤘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고, 김정은에 맞는 권력구조를 구성한 것으로 김정은 중심의 체제가 과거에 비해 안정화 된 것이라고 봤다.

북한의 대화제의 진정성 갖기 어려워 & 남북정상회담 등 통 큰 결단 있어야

북한핵문제 관련해서는 두 장관 모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제재와 더불어 대화와 협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 등 대북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당장 정부가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여

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류 전 장관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 요구는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마다 대북정책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도 북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감

했다.

그렇지만, 두 장관은 최근의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의 입장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지지 말고 6자회담을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전략적으로 풀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대북정책에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상회담 등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기도 했다.

류길재 전 장관은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는 하나의 수단이며, 다양한 협상과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끈을 이어가서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는 핵문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핵 제재 중이라도 남북의 대화채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서로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접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통일공감포럼 행사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구천서·김필건·김삼열·송광석·류종열·이승환·이정은·이장희·이정의 민화협 공동의장,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포럼의 발족을 축하했다. 앞으로 통일공감포럼은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대담 등 다양한 방식의 ‘통일공감대화’를 진행하고, 민관대화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한 출판 사업 및 온라인 활동, 워크숍 및 탐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일공감포럼은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는 각 분야 전문가와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통일공감대화는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I N V I T A T I O N

통일공감포럼 제2차 통일공감대화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두 번째 ‘통일공감대화’에서는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회식 (14:00)
 인사말 김천식·차경애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격려사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축 사

통일공감대화 (14:30)

사회 **김정우** 전 국회의원
 대담 정치분야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분야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분야별 가나다순

문의 및 참가신청 민화협 사무처 전화 02-761-1213 www.kcrc.or.kr

시집 『평화를 향해 철마는 달린다』펴낸

테레사 현

캐나다 요크대 교수



철마는 달리고 싶다
잃어버린 벗들 찾기 위해
부산 급행열차 타면서
문무왕 함성으로 들리는 전장
한양 송례문 합창곡
평양성 메아리
가방에 넣었다가

나라 에워싸는 만리장성
몽골말 달리는 별판
시베리아 동토대 그리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 지나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 도착할 무렵
가방을 열어드리고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불러
민족의 노래
평화의 노래

<평화를 향해 철마는 달린다> 전문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랑으로, 결국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가 한글로 쓴 시집을 펴냈다. 벌써 두 번째 시집이다. 2012년 『판문점에서의 차 한 잔』 이후, 올 5월 『평화를 향해 철마는 달린다』를 펴낸 테레사 현(한국명 현태리) 캐나다 요크대 인문학부(한국학) 교수. 그의 우리 시(詩) 사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애 첫 시집을 한글로 펴낸 미국인 교수. 그는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그리고 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지난 6월 17일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테레사 현 교수를 만나 그의 한국사랑과 ‘통일 바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남과 북은 수 천 년 동안 함께 공유해온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죠. 때문에 저는 남북이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남북은 한민족이잖아요.”

유창한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테레사 현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를 졸업하고 아이오와주립대에서 프랑스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란 나라가 다가왔다. 한국에서 영어와 프랑스문학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84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10년 간 프랑스문학을 강의하며,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문학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한국은 ‘시인의 나라’였다.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의 문학사랑, 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점에 가면 젊은 학생들이 시집 코너에 몰려 새로 출판된 시집을 열심히 읽고 있던 모습을 기억해요. 사실 캐나다의 일반 시민들은

자국 시인들의 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소월의 시를 읽고 그의 시를 외워요. ‘아, 한국인들은 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꼈죠. 그러면서 저 역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학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며 많은 문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문학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시인의 나라’에서 목격한 분단의 상처

이후 1990년대 시학 교실에 참석하며 시 창작을 시작한 그는 2003년 『시와 시학』을 통해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다. 신기한 것은 그 이전까지 그가 자국 언어인 영어로 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한국문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기에, 그의 첫 시는 한글로 세상에 첫 빛을 본 셈이다. 이후 캐나다로 대학을 옮긴 후에도 그의 한국문학 사랑은 이어졌다. 매년 여름 한국을 찾아 문인들을 만났고, 고은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하게 된

다. 그리고 그의 시에 대한 열정은 2012년 첫 시집 『판문점에서의 차 한 잔』으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그의 시는 우리 문화, 전통과 함께 분단의 아픈 현실도 담담히, 때로는 절절히 담아내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두 번째 시집은 첫 시집 이후 4년 동안 써 온 시를 모은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 하나는 북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었어요. 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시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핵실험, 식량난, 인권문제 등 주로 나쁜 이미지만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마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꿈 바꾸니 사가세요>라는 시에서 ‘요즘에 북녘 장마당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활짝 핀 꿈 바꾸니를 이고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죠. 또 <장터 사람들>이란 시도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역 앞 광장에 / 물려드는 사람들 / 희망 보따리 하나들 이고 지고’라고 표현했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으로 담고 싶은 마음에서 쓰게 되었어요.”

<평양 아가씨들 말한다>라는 시는 ‘발랄하게 / 팔짱을 끼고 붉은 넥타이 맨 여고생들 / 뒤죽박죽의 시장 좁은 상가 길 지나가며 / “자기를 선택할 그 시간 /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며” 재잘거린다’는 구절이 보인다. 할머니, 어머니 시대를 지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북녘의 젊은이들의 꿈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비록 아직까지 북한을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그동안 북한을 잘 아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시인. 앞으로 남북관

계가 개선되고 좋은 계기가 된다면, 학술교류나 문화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문학의 알림이 역할 하고파

테레사 현 교수의 시를 읽다보면 때론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 특히 도시 번두리 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돋보인다. 시인이 겪고 느낀 한국인들은 삶에 대한 열정과 함께 유머감각도 갖춘 이들이다. 때론 성격이 급한 모습도 보이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기에 시인은 남북의 통일을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푸른 눈의 이방인이 한글로 시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었고,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알게 되었다. 아마 앞으로는 한글로 시를 쓰는 외국인들이 점차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시집의 마지막 시인 <독자여 안녕!>을 보면 ‘안녕, 내 청중 내 시 청자들’이란 구절이 있어요. 이 건 어찌 보면 한글이니까 가능한 말장난이죠. 이 문장을 영어로 정확히 번역해 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Bye / My fellow bards and minstrels, muses and troubadours / Until we meet again on Mount Parnassus!).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열심인데, 이 책을 보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모국어가 영어인데, 한글로 시를 쓰고 그걸 다시 영어로 옮겼으니깐요. 번역에 대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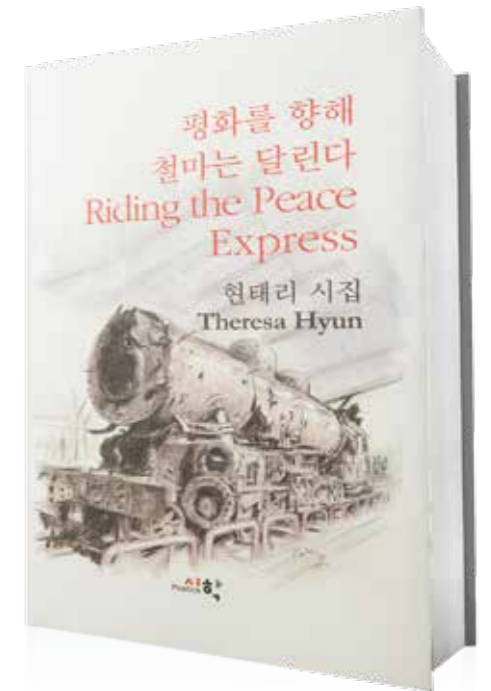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 시인은 반

갑다. 오랫동안 한국학 강의를 해온 그이지만, 최근엔 부쩍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주로 한국 문학, 한국 문화 강의를 하는데, 젊은 한국 강사가 한국어로 학교에서 강의할 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시인의 강의 역시 초창기 10여 명에서 이젠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한국에 대한 오랜 인연을 가지고 한국학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더 재미있고 알찬 강의를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무겁다. 시인의 바람 중 하나는 한국문학을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다. 최근 작가 한강의 소설이 맨부커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번역이나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끝으로 시인에게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록 지금은 갈등과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시처럼 다시 평화와 만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역시 ‘만남’을 맨 먼저 꼽았다.

“남북 간 문화교류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북의 학생들이 서로 오가고, 예술이나 문학 등을 매개로 활발히 교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더불어서는 북한문학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교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문학에 대해 강의할 때면 번역 소개된 작품이 극히 일부 분임을 느껴요. 북한문학을 우리는 주로 체제 선전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당대 북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삶, 꿈 등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 작품들을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테레사 현 교수. 그는 문학작품은



읽는 이로 하여금 용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꿈이 필요하다. 꿈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 물론 현실에 대한 외면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도 항상 간직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인은 생각한다.

“다음 작품은 이제 구상 중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작품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남북이 모두 서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 편견을 갖지 말고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화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도 현실로 다가오리라 믿어요.”

특별기고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한반도 평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민화협 공동의장



지난 5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2차대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71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히로시마를 찾았다. ©연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5월 27일 일본 미에 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원폭투하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했다. 그는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내용의 소감을 발표했다. 한국인 희생자는 거론했지만, 100미터 떨어져있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는 찾지 않았다. 이 방문에서 미국은 1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원자폭탄 투하 자체를 사과하지 않았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대변인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정부는 원자 폭탄 투하 자체를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고심해 왔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2차대전시 적대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관계로 전환하는 미일관계의 마무리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오바마 방문, 냉전질서 회귀에 대한 우려 불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 정치권과 이의 추종세력들은 오바마 방문 시 원폭투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번 방문을 전범국가로서의 일본 면책 및 일본 군사대국주의 강화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명백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국가들은 처음부터 방문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전범국이 원폭피해국으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한마디로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원하던 원치 않던 일본 군사대국주의 추종자들이 노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냉전질서 회귀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원래 태평양전쟁의 책임과 일제 식민지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던 평화조약이었지만, 초심과 달리 냉전질서 대비라는 명분

하에 일본의 전후 전쟁책임을 철저히 규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1946년 초안 작성 시 일본군사대국주의 억제와 전쟁 및 식민지책임을 응징하려는 미국의 초심은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팽창정책과 냉전에 대비하기 위해 선포된 1947년 3월 2일 트루먼 선언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기초가 바뀌면서 퇴색되었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안에는 전쟁 및 식민지책임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보다는 일본을 적당히 선무하고, 냉전에 대비하는 동아시아 미국정책 협력자로 참가시키려는 내용이 담겼다.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였던 한국, 타이완은 서명당사국에서도 제외되어, 전범처벌 고발자 및 전시 손해배상 청구권자 자격에서도 배제되었다. 한국, 타이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 손해배상 대상국 48개국도 아니라, 제4조 종전으로 분리되는 국가로 분류되어 미국은 일본과 양자 간에 전쟁 중, 식민지 기간 중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의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의 결과물이었다. 때문에 65년 체제는 처음부터 일제식민지 합법을 전제로 한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 체제일 수밖에 없었으며, 과거식민지 문제인 독도문제, 일본군대 성노예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법적인 미해결문제가 근본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6년 도쿄전범재판에서 조선과 대만의 전쟁 및 식민지 피해자들은 고발자 자격에서 제외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1조가 수용하기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도쿄 전범재판을 승자의 재판으로 여기면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인에 대한 전범자 처벌요구 등에 근거해 동경재판의 전반적 불공정 및 원폭투하자의 국제법 위반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때문에 유죄를 받은 A급 전범 25명중 7명만 처형하고, 19명은 전원 석방되어, 전후 일본의 정치, 경제, 언론 각

계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나치 전범자들의 철저한 집행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현재 일본 역사의 중심세력은 이들의 후세 및 이들을 지지하는 전범세력들이다. 이들은 대동아공영권, 식민지근대화론, 군사대국주의에 근거해 영광스런 일본 식민지제국으로 회귀하려는 환상에 젖어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오도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책임을 전혀 응징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의 중심 지도층의 동아시아평화와 한일관계에 대한 주류입장이다.

지나친 미일동맹, 동북아 패권경쟁 가열시킬 수 있어

그런데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로 등장하자 세계 경찰국가이자 동시에 동아시아 맹주였던 미국이 중국견제론을 강하게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부상은 일본과 미국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동아시아 평화질서는 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신조의 군사대국주의가 이러한 동아시아의 신냉전 질서 회귀에 편승해 과거 식민역사를 부인하고 군사대국주의지향이라는 정치적 야욕을 강하게 관철하기위해 미국을 옥죄었다. 비록 미국은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중국견제론과 일본의 유무형의 강한 군사대국주의 협상의 산물로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전범국가로서 판정받은 1946년 도쿄재판의 결과를 부인하려는 현 일본 극우정치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있다.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전쟁 민간인의 위로와 원폭을 사용하게 한 일본 군사대국주의자의 책임은 전혀 별개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의 라이스 안보보좌관도 이 점은 위에서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한반도와 동

북아에 있어 몇 가지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첫째,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일본 및 미국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원자폭탄은 일본에 투하됐지만, 일제식민지배와 민족말살정책, 강제동원 등으로 인해 일본에 끌려갔던 한국인 사망자 4만 명을 포함한 7만 명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이들은 현재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 '최종해결'이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으로 전혀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꾸려가고 있다. 이 방문 후속조치로 일본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특별입법에 착수해야한다. 그리고 원폭이 투하된 지 71년 만에 통과된 지난 5월 19일 대한민국국회가 가결한 '한국원자폭탄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허점투성이이므로 피해자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도쿄전범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된 일본국가와 그 전범에게 면책이 주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도쿄재판의 일본 전범유죄는 1951년 UN 총회결의와 Genocide금지협약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와 국제법으로 수용되었다. 셋째, 오바마 방문 시 지나친 미일 동맹의 강조가 일본 군사대국주의 및 이에 기초한 일본 평화헌법개정에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 없는 단순한 히로시마 방문은 핵 없는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미래 국제사회를 열어가고 핵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순수한 평소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이미 도쿄재판에서 유죄로 판정 난 일본의 전쟁국가 책임을 면해주는 면제부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되, 원폭투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결정이다. 물론 원폭투하가 불필요한 범죄였다는 역사학자와 젊은 세대들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당시 미




한국인 원폭 피해자협회 관계자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5월 27일 히로시마평화공원내 한국인 위령비에 현화한 뒤 위령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호소했다.

국 트루먼 대통령의 원폭투하는 전쟁을 조기 마무리해 미국인과 일본의 수천만 민간인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충분히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일본은 마치 자신이 유일한 핵 피해국가인 듯 일본인들의 전범행위를 철저히 감추려 하지만, 오바마의 방문이 전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원폭피해국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아베 신조의 외교 전략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일의 강한 중국견제론이 한·미·일 신냉전 동맹 구조로 연결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질서 확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신냉전질서로의 회귀이자 역사의 퇴행이다. 결론적으로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핵실험을 빌미로 미일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본의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희

석시키고, 원폭피해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아베 신조의 치밀한 외교 전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나친 미일동맹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패권주의를 자극시켜 동아시아 신냉전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다.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한다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차질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뿐 아니라 역사문제에서도 일본의 과거 잘못에 편을 든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나친 일본 편향 외교정책은 향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장희는 독일 쾰(Kiel)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외대에서 국제법 교수로 30년간 재직했다. 현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동시에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화협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북중관계 정상화 가능성 ... 대북제재 위한 한중 소통 긴밀히 유지해야

이상숙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지난 5월 6~10일, 북한은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를 개최하였다.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를 직접 하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과시하였고 신설된 조선노동당 위원장 직위에 취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핵개발·경제 병진노선의 지속을 확인하였다.

외부에서 북중관계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 취임 직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이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기 때문에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축전이 김정은 위원장 취임 직후 발송되었다는 점은 양국이 당 대회 개최 시기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당 대회 이후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담당 비서의 방중으로 나타났다.

7차 당 대회 이후 북중관계는 지난 해 북한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이 류원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보내 양국관계를 개선했던 장면을 상기시킨다. 북한의 당 관련 주요 행사가 양국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양국 관계가 당 대 외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7차 당 대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북한은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대외관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냈다. 리 부위원장은 5월 31일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고 6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을 가진 후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였다. 이로써 지난 해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이후 정체되었던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이 당 대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시

주석과의 면담 성사 배경은 북한 7차 당 대회 개최이다. 리 부위원장의 방중 의미는 바로 북중 간 당 대 외교의 일환이다. 당 대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 면담에서 “조선노동당 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북중(중조)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훌륭한 전통을 다시금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당 대 외교의 전통을 강조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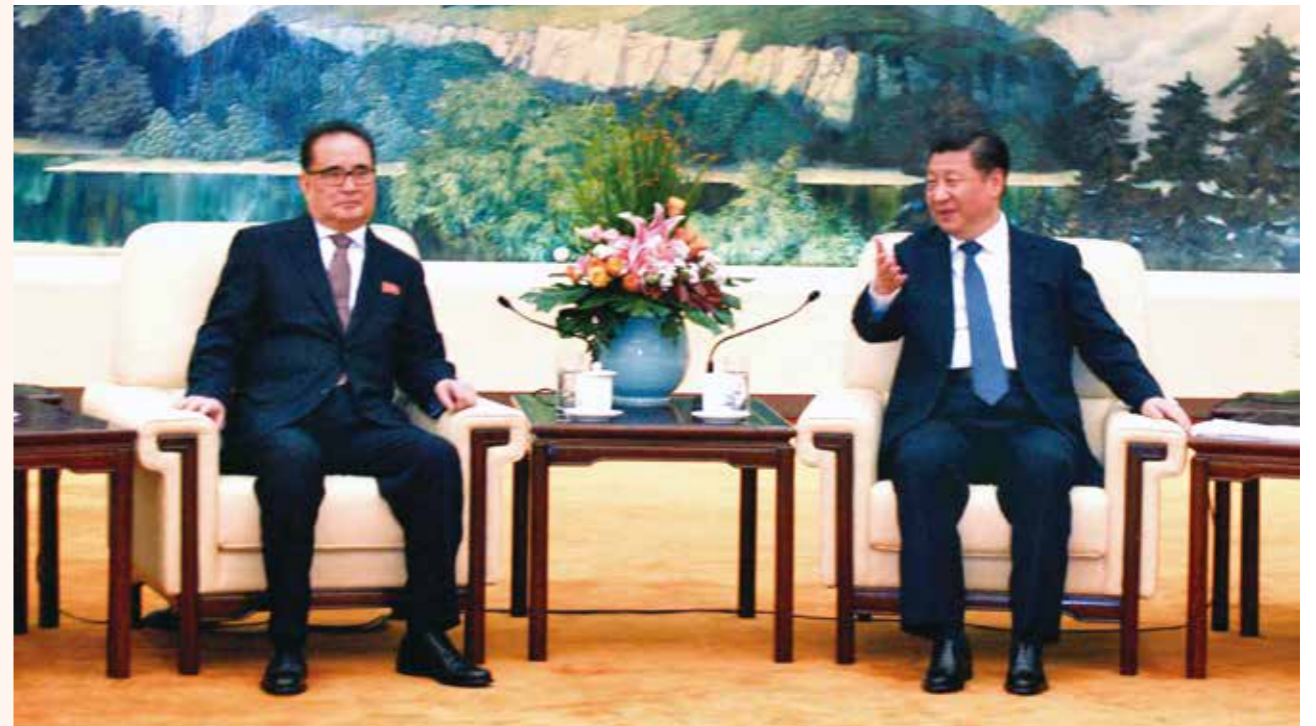
중국, 더 이상의 북중관계 악화 바라지 않아

위와 같은 7차 당 대회 이후 북중관계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행보와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로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개발에는 반대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대별하는 것이 ‘標本兼治(표오본젠즈)’인데, 여기에서 지엽적인 것(標)이 북한 비핵화를 가리키고 근본적인 것(本)이 평화체제이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관련국들의 대화와 협상의 의지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실제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수소탄 핵 실험이라고 선전하였을 때, 중국은 즉각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동참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하여 선정하였다.

그럼 시 주석의 리수용 부위원장 면담은 어떻게 보야 하는 것인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이 동일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반대하고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준수를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부분 이외의 정상적 무역관계는 북한과 할 수 있으며, 특히 안보리 결의에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 7차 당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양국 간 비공식 거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지만, 그것은 중국 당국이 의도한 바가 아니므로 중국은 이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

북중 간 전략적 소통 유지, 장기적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해야

이번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재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식량 지원을 매개로 한 중국의 경제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다. 넷째,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에 대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재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 7차 당 대회에서부터 재개된 의사소통이 대외관계의 핵심으로 등장한 리수용 부위원장을 통해 의사소통의 채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리 부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자리에서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류홍차이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덩세샹 중앙판공청 상무부주임이 참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지재룡 주중대사를 비롯하여 리창근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리길성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하여 양국관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식량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의 준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지 않는 식량문제로 북한과 접촉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할 수 있다. 중국은 식량 지원에 성의를 보일 것이고 이를 매개로 양국 경제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경제 협력은 중국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경제 협력 가능성은 특히 중국의 동북3성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연관이 있다. 최근 수년간 동북3성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 순위에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7월 지린성을 방문하여 동북 진흥을 강조하고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재개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동북3성에 7개 노선의 고속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2015년 9월 단둥과 선양을 연결하는 고속철이 개통되었



수십 대의 고속철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의 차량 기지 모습. 최근 수년간 동북3성에 7개 노선의 고속철 작업이 진행되었다.

고, 10월에는 중국 훈춘에서 창춘까지, 12월에는 단둥에서 다롄까지 고속철이 연결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북한과의 접경지역과 동북3성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어야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따라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이 여전히 핵문제에 대한 견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리 부위원장과 면담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보면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긴장 조성을 자제하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양국 관계가 악화된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까지 가기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의 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국 간의 간극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주시하고, 장기적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의사소통을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

이상숙은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베이징대 방문 학자로 초청되었다. 현재 국립외교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을 둘러싼 러·중의 미묘한 신경전, 한·중·러 공조체제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크림 병합,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의 입지 강화 정책과 아시아 방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2014년 3월 19일 외교부 성명)을 견지하면서도 대러시아 제재 참여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필요성, 통일외교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 중장기적으로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방의 제재가 러·중 간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동북아 협력구도를 경직화하는 것이 한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한국은 미국 및 EU와의 협조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그 제재가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점차 할 수 있는 영역과 분야가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악화와 서방 제재조치의 지속으로 인한 국제 금융상의 난맥이 양국 협력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1월 초 러시아 주도의 나진-하산 연결 철도 개보수 완료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중요 기반이 조성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연계하는 사업이자, 5·24조치를 우회하는 사업으로 이의 민간 차원 추진을 지지해 왔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사실상 포기 이후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나진-하산 사업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의는 매우 컸다. 더구나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 EU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시키려는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을 증진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은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 확대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며 남·북·러 가스관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2012년 북한의 대러시아 부채를 탕감해 준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던 북한으로서는 대러 관계 속에서 경제발전 동력을 찾고 러시아제 첨단무기 구매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제재 결의안이 가동되는 국면에서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요청해 관철시켰다.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허용, 러·북 간 광물자원 교역 담당 고위인사의 제제명단 제외, 북한 나진항을 통한 제3국산 석탄수출의 제재 대상 제외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향후 유엔에서 북한 비호 역할을 러시아가 떠맡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통해 대 한반도 영향력 증대 피하는 러시아

흑자는 희토류 등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적 효과가 정확하진 않지만, 북·러 간 가장 큰 교역 품목이 광물이며, 만약 이 부분이 차단될 경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북수출의 41%가 에너지 자원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유 30만 톤 외에, 그와 맞먹는 양의 석유 내지 원유가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의 일방적 중유 차단 등 강한 대북 압박 조치가 있더라도 북한은 러시아를 의지해 어려운 국면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러시아는 가장 핵심적 품목의 교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고리를 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봄 러시아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4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 내부의 취약 지점 중 하나인 식량 수급과 관련해 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혼란과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북한의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런 정책적 의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북한을 단순히 협력 파트너 내지 남·북·러 3각협력의 달성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 구축의 교두보로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저지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북한의 연성적 반응을 유도하던 러시아의 정책은, 점차 중국과 차별화된 대(對)한반도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되다가, 최근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렇더라도 러시아가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고 비호하여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점경국인 북한의 위험한 핵무장을 방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며 그 목표를 추구해 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는 일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책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계산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크림반도-우크라이나-중동-중앙아시아-한반도로 연결되는 쟁점지역에 대한 미국 및 중국에 대한 관계에서 최적의 이익 지점을 찾으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푸틴 3기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세적 방어'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강국 러시아가 지구적 및 지역적으로 지니는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크림과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의 핵심이해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력 투사를 통해 이익 거점을 적극 확보하는 한편, 중동에서는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보여준 적극적 중재와 협력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해 스마트하게 치고 빠지는 군사력 사용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는 모습이다. 이런 러시아의 공세적 방어 전략의 실천

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문제를 다시 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붕괴로 몰아가려는 무한정한 대북 압박은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견지할 것이다. 이런 러시아의 입장은 6자회담 복원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청에서도 잘 드러난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만약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경우 유라시아 및 중동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처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를 해결해 준 2012


년 이후 중국과의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진항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나아가 북한의 철도현대화 및 자원개발을 골자로 하는 “승리 프로젝트” 등 북·러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실현을 위해 진력해 왔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게 한반도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중요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미국과 벌이는 지역 및 지구적 게임을 위한 패(card)로서의 의미도 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대미, 대중 정책 카드로 활용하려는 러시아

따라서 러시아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 제재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정치·경제 활동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에 부합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을 실현하는 조건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행동을 동북아 지역의 군비강화를 위한 부적절하고 비대칭적 대응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동북아 지역을 대결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군비경쟁을 조장하는 행동과 미국의 지구적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최근 회담에서 재차 강조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결국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이 무력충돌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며, 긴장 국면과 무력충돌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할 나라는 미국,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점을 강변하고 싶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배제 당했던 4자회담 시기의 악몽과 수치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면

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 조치들을 들고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의 신빙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협력 고리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독자적 영향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해결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은 물론, 미국 및 중국과의 게임 속에서 한반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스포일러” 역할의 가능성을 모두 현시하면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북핵 실험에 대해 대북 강경책으로만 나가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정책을 무한정 따라가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중국이 북한을 강경 압박하는데 만약 러시아가 이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경사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은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러시아와의 조절에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여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중국의 대응에만 신경 쓰기보다 더 넓은 견지에서, 협력 뒤에 감춰진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 보기를 활용하는 한·중·러 공조체제 활성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범식은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북한 대외환경 변화,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로드맵 제시하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하였지만 전제 조건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간헐적인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은 제재국면임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류는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의 입장이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교류에 대한 입장 그리고 사회문화교류의 토대가 되는 최근 북한의 사회문화정책에 대한 고찰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7차 당 대회, 교육·문화·의료·체육부분 고민 엿보여

3대 세습체제인 김정은 시대는 여전히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당적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변화는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시장화의 결과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사회문화정책의 변화도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문화정책이나 대남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문건의 하나가 7차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당사업 보고이다. 사회문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교육체계, 교육내용·방법의 개선, 사회주의 보건사업 발전, 체육강국 건설로 국제적 체육신화 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학예술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도덕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인 내용을 공



2015년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한국불교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봉행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개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이나 문화부분의 성과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색적이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년 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지만 아직 전반적교육수준, 특히 중등일반교육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천만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체육강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부분과 관련하여 “현대의학발전추

세에 맞게 앞선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킴과 민거리의 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 대회의 보고가 정치적 수사라고 할지라도 북한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교육·문화·의료·체육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보편화라는 차원에서 교육 특히 교육체계와 관련된 교류, 영화부분의 침체를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고 최근 수 년 동안 북한에서 예술영화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서 영화부분 교류, 취약한 의료보건 실태 개선과 관련된 교류, 체

육부분에서는 북한 체육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와 관련된 교류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류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의 사업보고는 원론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치군사 회담이라는 점에서 남북문화교류가 단기간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은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북한 당국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교류를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8·15 등 전통적인 사회교류의 모멘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북 대화에 자신들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만월대 사업 등 기존에 합의되거나 추진하였던 사업의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8·15의 경우 평화와 핵실험 반대를 의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 핵실험 이후 제재국면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화 및 교류제의를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 대회에 나타난 북한당국의 입장이나 제재를 강조하는 남한당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대비하여 교류협력 재개 전략은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



개성 만월대유적발굴현장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는 남북 학자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을 재개하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한데, 전반적인 국면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재개 논리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의 계기로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대 국회의 개원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의 경우 남북관계기본법에도 상황에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남북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을 재개한다면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사업은 지속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합의되고 진행 중인 대북지원 사업의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 금속활자 발견과 같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만월대 발굴 사업 및 겨례말 큰사전과 같은 지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이산가족상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전통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었던 올림픽 등 각종 체육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류재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여름을 전후로 이산가족은 추석을 계기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의 현실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내의 분위기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류협력 자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넘어서서 통일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결단에 의해서 남북관계는 전환될 수 있다. 다만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교류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북한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1983년 버마의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단 교환이 성사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교류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시급해

남북관계 특히 사회문화교류협력의 경우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관계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부정적인 현실에서 시민사회가 독자

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역으로 시민사회가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교류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교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사회문화교류와 민간부분의 교류가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평화정착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위 ‘퍼주기’ 담론으로 대북지원이나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교류협력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논리에 대응하여 교류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변화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 궁극적으로 시장화라는 북한내부의 아래로부터의 변화 씨앗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남북한 대외환경에 따른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로드맵을 새롭게 제시하는 동시에 상황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교류재개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소망’에 바탕을 둔 북한붕괴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당위론에 따른 교류활성화 주장이 아니라 분야별 교류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와 사회에 교류재개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국내적으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부분 남북교류, 대북지원과 관련된 사회적 협의구조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의 교류활성화를 대비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준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현 단계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우영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화협 정책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 체제의 이해』,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등이 있다.

분단 현장에서 찾은 ‘평화의 시그널’

답사·정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권성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강지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간사
서희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송하은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지난 5월 18일 이른 아침,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과 민화협 회원단체 관계자 30여 명을 태운 버스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한지 약 한 시간여 만에 파주 인근 도로에 진입했다. 자유로를 따라 북쪽으로 더 올라가자 버스 좌측으로 길게 이어진 한강 하류가 나타났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서 김포시 끝자락과 북한의 개풍군이 맞닿아 있었다. 가장 짧은 구간은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니 남북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멀리해야만 하는 ‘애통한’ 사이이리라.

양쪽 어디에서도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더러 아침 안개까지 살짝 낀 탓에 고요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마주 선 둘 사이로, 강물은 햇빛을 품은 채 반짝이며 나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 앞으로... 어느덧 버스는 뉴스에서만 보던 통일대교를 넘어 점점 더 최북단에 가까워져 갔다.



청년과 통일, 그 멀지만 가까운 거리

첫 번째 경유지 임진각에서 평화랜드를 보았다. 문득 ‘북한에도 놀이공원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동시에 언젠가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 손을 붙잡고 깔깔거리며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진각에는 녹색 증기기관차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쟁 중 포격을 맞아 망가진 채로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임진각으로 옮긴 것이다. 기차의 몸체에는 수많은 총탄의 흔적이 아물지 않은 채 아로 새겨져있었다.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눈앞에 총탄이 날아가고 기차가 폭발하는 장면이 아른거렸다. 임진각 기차 앞에서 순진하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전쟁의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은 나날이 낮아져만 간다.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냉소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몰았다.

일정을 함께 한 민화협 이자현 지도위원은 “나는 젊은 사람들 탓 안 한다”며, 기성세대가 자기 입맛에 맞게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청년들이 통일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즉,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판문점으로 향하던 버스 안, “통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 함께 판문점에 가게 되어 희망을 본다”던 이자현 지도위원의 표정에 씩씩함이 묻어나왔다.

임진각에서 벗어나 민통선 내부로 들어가니 발 위에서 트랙터를 몰고 계신 어르신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지금은 한창 농사철

이다. 민간인 통제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흘러가고 있다. 우리와 마주보고 있을 이 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눈과 밭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곳곳에 지뢰표시가 즐비했다. 전쟁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판문점, 평화와 갈등의 모순지대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이자 휴전회담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협상장이다. 본래 남북한의 군인이 함께 경비를 썼으나 판문점 도끼 사건 이후로 분할경비로 전환되었다.

안내원을 따라 판문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푸른 판넬로 만들어진 회담장과 그 주변에 서있는 헌병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건너편 판문각 앞에는 북한 경비병이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예상과 달리 판문점 내 분위기는 사뭇 평화로운 듯 했다. 그러나 안내원은 “판문점은 협력을 위한 회담장이면서도 남북한이 직접 맞닿은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행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존과 상호 위협의 최전방이라는 ‘거대한 모순’의 공간, 판문점에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6·25사변 당시 다섯 살이었다는 이자현 지도위원은 “15년 전 판문점을 찾았을 때는(지금과 달리) 허름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휴전 당시 회담장이





임진각에 전시된 멈춰진 기차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임시로 지어진 후, 양쪽에는 각각 ‘판문각’(1969, 북한)과 ‘자유의 집’(1980, 남한)이라는 깔끔한 건물이 들어섰다. 두 건물을 포함해 점차 현대화되어가는 주변 풍경은 비극적인 분단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고착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남북 분단과 갈등’의 시그널은 판문점 곳곳에서 포착됐다. 1976년 8월 18일 미루나무 도끼 사건의 기억을 담은 추모비, 푸른색 회담장 내 마이크 선과 건물 밖 콘크리트로 표시된 분단선, 아무런 표정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남북 군인들, 그리고 남북한의 표준 시각의 차이 등은 안타까운 분단 현실과 경색된 남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떡통’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함께 이 모든 모습들은 ‘남북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상태’임을 더욱 와 닿게 만들었다.

잠시 사진 찍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진 촬영은 북한의 ‘판문각’을 등진 구도로만 가능했다. 판문각 앞에 우뚝 서 있는 북한 병사 하나가 보였다. 만약 남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없었다면 걸어서 5분 내로 그에게 도착했을 것이다. 그에게 달려가 말을 건네

보고 싶었다. 이북 사투리로 어색하지만 친근하게 대꾸해줄 것만 같았기에.

또 다른 안타까움, ‘분단의 상품화’

이영동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에 따르면, 판문점 관광객들 중 우리나라 사람의 비중은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한다.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 근처에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민족의 분단을 더 이상의 비극으로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단이 고착화되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잃어가는 사이 남북 분단은 점차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판문점을 비롯한 안보 코스는 7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한 해 3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음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만 간다. 이는 분단



판문점 회담장 내부

이 일상화된 국가의 모순이다. 북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판문점 안내원은 “북한 여행사를 통한 판문점 관광비용은 200만 원대”라며, 이는 “북한의 외화 수입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의 비극적 분단은 ‘일상화’를 넘어 ‘상품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 있다.

이 날 주차장에 있던 버스들은 ‘DMZ&JSA 관광 버스’ 라는 이름을 크게 내걸고 있었다. 몇몇 방문객들은 이곳에 방문한 사실을 그저 ‘특별한 관광’으로 치부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판문점 방문을 그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일의식을 갖기 위한 계기로 삼는다면, 분단의 상품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발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온 기자단은 무심코 다시 펼친 안내 책자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의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북 화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일까. 평화의 시그널은 ‘남북출입사무소’, ‘출·입경’ 등 남북을 잇는 각 개념들의 ‘이름’에 담겨 있었다. 남한과 북한을 서로 오가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출·입국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남북 출입을 관리하는 기관도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출입사무소’로 표기하고 있다. 북한 역시 남한과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완전히 다른 ‘국가’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로를 따라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 훌쩍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물은 아침처럼 여전히 빛을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크게 다뤄 왕래가 끊긴 형제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오랫동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한반도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이지만 통일 협력의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기에.

“우리가 비록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예요. 아무리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놔도 인간으로서 느끼는 사랑은 어떤 걸로도 지울 수 없는 거지요.” 이규홍 민화협 회원사업위원장의 말을 뒤로한 채, 쪽 이어진 낡은 철조망 너머, 푸르게 펼쳐진 들판이 노을에 반짝이고 있었다. 🌅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

이상현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조인을 통해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으로 지금도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긴장감은 계속되었다. 남측에는 미군이 주둔하였고, 북측의 중공군도 1958년까지 머물며 대치를 이어갔다. 또한 남과 북은 각각 동맹국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방위협정, 한미우호통상조약,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어나갔고,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남과 북의 충돌 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01



남측

- 01 판문점의 남측건물인 자유의 집 기념우표 1966.2.15
- 02 한미상호방위협정체결기념우표, 이승만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악수모습 1954.12.25
- 03 한미우호통상상항해조약 체결기념우표 1957.11.7
- 04 예비군의 날 기념우표 1972.4.1.
- 05 민방위대 창설 1주년 기념우표 1976.9.15



09

국가 내부적으로도 남과 북의 긴장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우표와 민방위대 창설 1주년 기념우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넘어, 궁극적인 통일의 길만이 오늘날 길게 이어진 휴전선 철책을 끊고, 서로에게 겨누 총부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체육회 남부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이다.



북측

- 06 미군반대투쟁의 날 우표, 판문점과 함께 그려진 비둘기가 인상 깊다. 1959.6.4
- 07 판문점의 정전협정조인장의 모습 1991.10.27
- 08 중국인민지원군환송 기념우표 1958.9.10
- 09 중국인민지원군환송 기념엽서 1958.1.11
- 10 조소상호원조조약체결 1961.10.26
- 11 조중상호원조조약체결 1961.10.26



민화협 6차 의장단회의 개최

상임의장으로 나경원 국회의원(새누리당),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선출



민화협은 6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민화협 회의실에서 제9기 6차 의장단회의(이사회)를 개최하고, 단체 대표직이 변경된 상임의장, 공동의장, 집행위원장을 교체 선출했다.

상임의장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국회의원(전임 장윤석 前 국회의원)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임 안양옥 前한국교총 회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나경원 상임의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평소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 왔다. 하윤수 상임의장은 현재 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이로써 민화협 상임의장단은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하여,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나경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정당과 경제·노동계, 여성,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9명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공

동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을 집행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하고,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와 통일문화행사 추진 방향 등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화협, 2016 제주포럼 “동아시아 녹색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



지난 5월 25일에서부터 5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된 '2016제주포럼'에 민화협이 참여해 동아시아



민화협 여성평화통일부산포럼 개최 “왜 여성들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하는가”



평화와 협력을 주제로 한 통일정책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정치군사,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의 방향과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5월 27일 ICC제주에서 진행된 포럼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과 '동아시아 녹색평화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내각총리,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한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민화협 회원단체 실무실행 역량강화 프로그램 '향상' 90% 이상 만족도 보이며 성황리에 마쳐



민화협은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5주 간 민화협 회원단체 실무자(24개 단체 34명)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실무실행 역량강화 프로그램 '향상'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쓰기 및 보고서 작성, 구글 활용법, 사업기획까지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구성되었고 실무역량 증진을 위한 강의 외에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의 통일 특강,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특강 등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강의들로 구성되었다.

민화협은 지난 6월 21일부터 이틀 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여성평화통일부산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왜 여성들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평화와 통일공동체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화협 여성위원회와 부산여성뉴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서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부산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진민자, 최영애 민화협 여성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성향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함께 노력해 최종 목표인 통일까지 어깨동무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기조연설은 이금순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의 '여성, 통일을 말한다'와 이송희 신라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부산, 평화를 나누다' 순으로 진행됐다. 이금순 원장은 "북한 이탈주민 중에 많은 수가 여성인 만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 등을 연구하게 됐다"며 "여성들이 실제 통일과 화합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희 교수는 "부산은 피난민이 모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라며 "전쟁 속에 평화를 만든 곳이 바로 부산이고 그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여성평화통일 라운드테이블은 하선규 부산YWCA 회장의 사회와 김혜경 강서구종합사회복지단 단장, 박명자 실향민, 신미녀 새롭고하나된조국을 위한모임 대표, 장선화 부산여성회 공동대표,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의 참여로 진행됐다.



제3회 청소년통일공감대토론회

통일을 향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목소리 “통일의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취재 및 정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강지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간사

문현예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함모임 간사

이종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사진 장경운 객원작가



지난 6월 12일,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과 ECC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 시작한 대회는 남북문제 및 통일관련 국내 최대의 토론대회로 해가 갈수록 참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 아침 행사장에서 마주친 학생 두 명에게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결의를 물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호기로운 대답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 학생이 고등부 대상을 받아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리라고는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개회식 시작 전, LG컨벤션홀은 참가 확인을 하는 학생, 준비한 자료를 검토하는 참가자, 긴장한 학생을 달래는 학부모 등으로 활기가 넘쳤다. 모두의 얼굴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개회식에서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참여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존경과 축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각 40팀, 40팀, 28팀 등 총 108개 팀이 참여하였다. 한 팀당 3회의 예선을 거치며 심사위원 점수와 다승을 기준으로 결승전에 올라갈 팀이 결정되었다. 예선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문틈 사이로 참가자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자신만의 생각이 가득 담겨 흘러나왔다.

초등부, 우리도 어리지 않아요!

토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초등부 대회장 앞은 준비해온 토론 자료들을 읽어보며 대결(!)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제는 대학생은 물론 성인에게 제시해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열

Q 우승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A 저희가 준비를 딱 3주밖에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입안문 수정을 엄청 많이 해서 나왔어요. 결승전에서도 저희가 말이 좀 막히고 긴장을 많이 해서 우수상 정도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정말 행복해요!

Q 토론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서 문자로만 (준비)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안이란 근거를 쓰는 게 많이 힘들었죠.

심히 준비하는 초등부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과연 어떻게 토론을 진행해갈지, 어떤 주장을 펼칠지 궁금해졌다. 1라운드를 끝낸 한 팀은 “실수한 것 같아 우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떨렸지만 토론을 하다보니 몰입하게 되었고, 점점 재밌어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초등부 결승전에서는 ‘IPGIRLS’팀과 ‘백두에서한라까지’팀이 만나 각자 통일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인 ‘IPGIRLS’는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통일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 후 모병제를 실시하면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반대 측인 ‘백두에서한라까지’는 ‘장기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심각하여 통일시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인해 경제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를 근거로 제시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양측 모두 열정적으로 임한 결승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받은 팀은 찬성 입장을 맡은 ‘IPGIRLS’팀이었다.

통통! 툭툭 튀는 중등부

중학생 시절은 이른 바 사춘기로 자신만의 생각

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때문일까. 중등부 친구들의 이야기는 보다 흥미진진했다. 팀명에서부터 또래의 친구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톡톡 튀고 재기발랄한 답변이 넘쳤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이다'팀의 팀명 의미를 물었다. '사이다'팀은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신조어를 쓴다며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톡톡한 분위기를 시원하게 뚫어보자"는 의미로 사이다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다 한다. 밝게 웃는 여중생들이 모인 '통꽃'팀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통꽃처럼 팀의 조화를 이어 대회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통일 관심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자 최지우 학생은 친구들이 뉴스를 통해 정보를 많이 접한다며 "뉴스를 보면 심각한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데, 북한에서 어떤 축제를 했다, 무엇을 먹는지 등 청소년이 관심 가질 재미있는 이야기도 뉴스에 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래 청

소년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언론의 문화적 의제설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윤서 학생은 통일은 항상 무거운 주제로만 다가온다며 북한 문화 체험관 등을 만들어 체험활동이나 수학여

Q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우지호 대회를 통해 통일이라는 큰 관문에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고요. 또 성적을 떠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정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지호, 김형욱 통일 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통일 교과서를 쓰더라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흥미를 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 통일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김동건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행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성세대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들이었다.

중등부 결승에서는 '통일준비를 위해 정규교육 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를 주제로 경합을 벌였다. 찬성 측 '라운데라'팀은 효율적으로 통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대 측 '디세르투스'팀은 교과서에 객관성 담보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반대 측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부, 치열한 경합의 장!

1차 예선이 끝나자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각색이다. 웃으며 답소를 나누는 팀, 다음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고심하는 팀, 벌써 떨어질 것 같으며 낙담하는 팀. 이중 유독 빨간 체크무늬 교복과 '까르르'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로 눈에 띄는 팀이 있었다.

'디베테랑'팀, 이름도 심상치 않은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동탄국제고등학교 최지현, 서현, 강민욱 학생이었다. '디베테랑'에 대해 궁금해 하자 '디베이트'와 '베테랑'의 합성어인데, 디베이트의 베테랑이 되고자 한다며 명랑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평소 토론활동을 자주하는데 '통일'을 주제로 토론해 본 적이 없어 이번이 그 계기가 되었다며 경쟁도 중요하지만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고등학생의 풋풋함과 당당함을 엿볼 수 있었다.

고등부에서는 28팀 중 '로파드'와 '가라사대'가 결승전을 치렀다. 다리를 떨 정도로 긴장한 친구도 있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담은 목소리는 결코 낮지 않았다.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다"였다. "단계적 비핵화 실현을 통해 남북협력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에 "남북한 협력으로 인식적 변화를 주고 비핵화에 다가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의 "남북이 자주

Q 팀명인 가라사대는 무슨 뜻인가요?

김영훈, 황규현 저희가 하는 말이 전부 실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토론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Q 꿈과 통일이 관계있나요?

박지상 제 꿈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도 북한에서 일하게 될 텐데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으니까 분쟁이 많을 거라 예상해요. 그런 분쟁을 풀어나가고 그런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적으로 판단하여 비핵화를 주장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협력의 대전제는 정치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핵은 우리 사이의 벽이다"라고 반박했다. 고등부 결승전은 비핵화가 우선인지, 협력이 우선인지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었다.

최우수상으로 '로파드'가 호명되자 대상을 받게 된 '가라사대'팀이 환호성을 질렀다. 아침에 우승하면 꼭 다시 인터뷰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라사대 황규현, 김영훈, 박지상 학생을 다시 만나보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많은 학생에게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최 측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민화협 홍사덕 대표상임 의장은 "여러분은 높은 자존심을 가져도 된다"라며 통일 문제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고민했던 학생들을 칭찬했다. 각자 가진 생각을 세상에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 그 중요한 능력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있기에 청소년통일공감대토론회의 다음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2016 통일박람회

통일 염원 함께 나눈 '2016 통일박람회' 민화협, 평화와 통일염원 트리아트로 많은 호응 얻어

취재 및 정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황지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정현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왼쪽)이 통일박람회 기간 중 민화협 부스를 찾아 트리아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주최한 '통일박람회 2016'이 지난 5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통일 관련 단체·기관 140여 곳이 참여해 통일 염원 기획 전시, 남북 음식 한마당, 통일 상상 놀이터, 개성공단 제품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그래서 통일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 갈등해결과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통일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통일 박람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통일입니다'의 해답을 찾고 그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며 통일을 향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성 만점 부스, 통일 위한 마음은 하나

박람회에는 참여 단체에서 저마다 준비한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의 행사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남북한 음식을 비교 체험하는 부스에서는 북한 음식을 먹어보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또한, 다른 듯 같은 북한말과 우리말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화폐와 책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자료를 만나보는 각종 부스에는

어린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민속춤 공연과 버스킹(거리공연) 등은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단체·기관이 참여했는데 특히 언론·학술단체들이 중고생 방문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언론단체 부스의 체험행사와 경품 추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학술단체 부스에서는 각 대학의 관련 학과에 관한 소개를 들으며 입시설명회에 온 듯 눈빛을 반짝였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부스에서는 '지장으로 한반도 채우기', '스티커 타투하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스티커 타투를 통해 한반도 모양이나 '통일은 바로 지금'과 같은 문구들을 손등에 그려 넣는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송채린(동국대 북한학과·20) 씨는 "북한학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다양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둘러보며 교류를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맑은 날씨의 주말에 진행된 덕분에 박람회에는 소풍을 나온 가족들의 참여도 많았다. 광화문 광장의 잔디밭 위에서는 한국 풍산개 종 보존을 위해 진행된 '풍산개와 함께 사진 찍기', 38선 부분에 있는 바를 지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림보게임', 통일 염원을 담아 흰색 연을 직접 꾸미고 날리는 '통일 메시지 연 날리기' 등이 펼쳐졌다. 어린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놀이하듯 통일에 대해 배우고 고사리 손으로 통일의 꿈을 적어 나갔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박람회에 방문한 최현정(용인·48) 씨는 "아이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고 통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씨의 딸 박나미(12) 양은 '언제 통일이 될까'라는 질문의 판

넬을 보며 '3년'이라고 적힌 문항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수줍게 웃었다.

민화협과 함께, 풍선 타고 화해와 통일 염원 두등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민화협과 함께 통일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참가해, 통일 아이스크림 제공, 평화통일 염원 사진 찍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화해, 통일, 평화 등 희망의 메시지가 적힌 풍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의 트리아트 배경에서 진행된 평화통일 염원 사진 찍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민화협 부스에서 행사 진행을 함께한 통일공감기자단 서희준(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22)씨는 "박람회에 방문한 시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 진행에 참여하게 됐다"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방문해주셨고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화협 회원단체이기도 한 새롭고하나된조국을 위한모임에서는 '출발! 통일열차'라는 주제로 부스를 진행했다. 잔디밭에 설치한 열차 모양의 조형물에서 방문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통일'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을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박람회 기간 수시로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통일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일반 시민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는 이듬해 행사를 기약하는 등 통일박람회를 연례행사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현의 외교토크 -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정세현 저 | 서해문집 | 2016. 6

외교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풀었다. 북한과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각각 외교의 주제로 놓고 통일을 위한 길을 고민했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연속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저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주목받았던 대북 관련 이슈를 해설하며 그때그때 취했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동북아 각국이 펼치는 외교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분석한다. 자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불안을 조성하는 북한, 중화부흥을 꿈꾸며 굴기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북핵 문제를 이용하는 미국, '보통군대'를 가진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미국을 따르는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 역학 관계 안에서 한국이 저지른 외교적 오판과 그에 따른 손실을 따져 보았다. 2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냉정한 대북 인식을 도모한다. 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며, 외교에서 자기중심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저자는 외교의 기본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 국익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통일이라고 강조한다.



베를린장벽의 서사 - 독일 통일을 다시 본다

김영희 저 | 창비 | 2016. 6

독일 통일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복원해낸 책으로, 국제문제 전문 기자 김영희가 1945년 2차대전 종료부터 2016년 현재까지 독일 현대사를 두루 살피면서 통일의 여정을 촘촘히 훑어본 '독일 통일 70년사'다. 국내외의 기존 관련 도서가 대부분 1990년 10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의 지정학을 주목하는 데 반해, 이 책은 서유럽 특히 독일 정책입안자, 전문가들의 방대한 자료를 저자가 직접 살펴 통일 안팎의 이야기를 집약해낸 종합역사서다. 한반도 문제를 단순히 국내 정치의 맥락이 아닌 세계정세 속에서 풀이함으로써 탁월한 안목과 식견을 제시해 온 저자는 관련 문헌을 폭넓게 참고하는 한편, 통일로 가는 지난한 과정을 흥미로운 복선과 극적인 일화를 담아 한편의 대서사로 만들어냈다. 우리의 통일연구에 보탬이 될 좋은 연구서이자 근현대 유럽 정치의 복잡한 난맥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유럽 현대사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베를린 장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님을, 통일은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지난하고 치밀한 과정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통일 D-1000

황하영·김동하 저 | 소네트 | 2016. 6

북한 전문가들은 2030년 즈음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정말 남북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부작용 없는 통일을 위해 통일도 여행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설 〈시뮬레이션, 통일 D-1000〉은 2030년에 남북통일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D-1000이 되는 2027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시뮬레이션 중, 특히 교육 분야에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을 모티브로 한다. 다른 체제, 다른 문화 하에서 살아온 남북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실제 교육현장과 같은 집체 교육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면서, 오랜 간극과 깊은 갈등을 온 힘을 다해 유쾌하고 눈물겹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이다. 사사건건 갈등을 야기하는 리얼하고도 버라이어티한 남과 북의 만남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그들의 아슬아슬한 동고동락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황하영은 통일을 너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 겪게 될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감당하고 끌고 가야 할 일이니 때문이다. 저자는 남북 간 통일이라는 주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책이 그 해답을 얻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다.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전영선 저 | 경진 | 2016. 7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는 의미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일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반문이 앞선다. 통일문제나 북한문제가 정치인이나 일부 전문가의 몫으로 인식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첫 출발은 북한을 잘 아는 것이다.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북한의 행정과 권력'으로부터 북한의 일상생활, 교육, 먹거리, 과학기술, '체육·스포츠'에 이르기까지 17개 분야의 북한 정보를 차분히 정리했다. 북한의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일갈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과 해설을 곁들인 통일입문서이자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민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는 많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낯설기 때문이다. 책은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종합정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기에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자료와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북한인권법'까지 가장 최근 상황이 실려 있다. 260쪽 가까운 두툼한 책이지만 400여 장의 사진과 자료가 가득성을 높여주고 있다.

민화협 사서함

2016 May / July Vol.80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0호의 정답은 '한반도미래연구원'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민화협 사서함은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통일의 시작, 통일교육과 통일전문인력양성'을 읽고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와 교육, 전문가 양성이 뒤따라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베트남에서 본 것처럼 흡수된 전쟁에 의한 통일이든 한 나라가 되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따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도 충분히 연구 검토해 놓아야 통일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김태완 서울시 강남구

'강력한 제재 이후 창의적 복핵 해법 준비해야'를 읽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인해 상호불신과 불안이 커져 가고 있는데 북한이 국제사회 여론을 수용해 한반도를 위기와 위협에 휩싸이게 하는 핵 보유보다는, 개방과 개혁 등 진취적이고 현명한 자세로의 전환으로 남북관계를 교류 및 상호신뢰 관계로 설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핵 보유는 남북을 긴장과 대치로 만들뿐 통일에의 길도 멀게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한성 부산시 북구

북핵의 긴장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봄을 위한 여정을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꾸준함으로 이어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공간·통일공간-DMZ Train 경원선'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희망의 과정을 통한 평화통일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긍정을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향한 바람을 위한 그 역할을 각자의 영역에서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민족화해>도 앞으로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영 경상북도 포항시

'청년통일대화'를 읽고 청년들의 통일의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 모습, 통일 이후의 미래, 통일로 인한 우려와 극복과제, 통일 이전에 해결할 과제,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꾸밈없고 진솔하게 나눈 젊은이들의 대화를 읽으면서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와의 괴리감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솔직담백하면서도 대안을 위한 진정성 있는 통일 의식이 확고하다는 면에서 우리의 통일은 분명 희망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지하 전라북도 군산시

'통일전문인력, 체계적인 양성설계도를 그리자'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통일준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통일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계적인 통일전문인력양성의 설계도를 잘 그려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인 충청북도 청주시

민화협 2016 대학생 통일드림아카데미

제1기 토토드림어 모집

2016년 7월 12일(화) ~ 7월 15일(금)
서울 광화문 및 분단현장(철원) 등

프로그램 통일소통강연, 통일수다, 통일런닝맨, DMZ 밭아보기, 한탄강래프팅

문의 민화협 02-761-1213

접수기간 2016. 7. 3(일) 까지
대상 전국 20대 대학(원)생 누구나 모여라 (선착순 40명)
참가신청 아래의 '참가신청 GO!'를 클릭
참가비 딱 만 원
 기업은행 221-129760-04-142
 (예금주: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토토드림어란?**
토토는 '통일'의 뜻을 가진
드림은 '꿈'의 뜻을 가진
어는 '사람'의 뜻을 가진
 '대학생 통일드림아카데미'의
 캠퍼스 리더입니다.

"저기, 우리 얘기 좀 해"

일방적 강연이 아닌 동네 형, 오빠(?) 같은 강연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보고 알아가는 시간!

1. "북한이 왜? 통일이 왜?"
남한과 북한, 그리고 통일 알아보기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조빙연구위원

2. "대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거야?"
남한 청년의 통일 이야기
최윤현
최계바라기획사 대표

3. "안녕, 우리도 데리에 있어!"
북한 청년의 통일 이야기
박대현
우려없는 남북차 지원정보 어플 '우리은' 대표

"방학인데 몸 좀 풀어볼까"

1. 통일, 런닝맨
통일, 북한 이야기에 관심 있는 곳이 이렇게나 많았어? 미션 장소들을 돌려 조별미션을 수행하고 퀴즈를 통해 뒷풀이비를 획득하라!

2. 여름 레포츠의 꽃, '래프팅'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한탄강래프팅

3. Walk & Talk
분단의 기억이 담긴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내라.

이 외에도, 특전!

- ▶ 지방거주자 서울 일정 동안 숙소 (게스트 하우스)제공
- ▶ 조별 단위 활동으로 더욱 끈끈해질 우리 사이~♡
- ▶ 토토드림어 후속 사업 및 민화협 기행 프로그램 등 우선 선발권 부여

주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관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

후원 통일부